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25개 조례 시범평가

2020. 10.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0.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현황 및 분석	5
제1절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	7
1.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중요성	7
2.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8
3. 입법평가와 정책평가	9
제2절 입법평가제도 현황	11
1. 입법평가 조례 기본 현황 및 체계	11
2. 광역의회 입법평가 조례	13
3. 국회 입법평가제도	19
제3절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분석	23
1. 경기도 입법평가기준	23
2.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기준	24
3. 강원도 입법평가기준	26
4. 울산광역시 입법평가기준	26
제3장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31
제1절 평가대상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의견	33
1. 총괄	33
2. 유형별 검토의견	35

제2절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결과	50
1.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50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71
3.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116
4.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	144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	167
6.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196
제3절 조례 통·폐합 방안 검토	232
1. 개요	232
2. 통·폐합 사례 발굴	232
3. 산업단지 관련 조례 통합(안) 제시	235
4. 조례입안모델(안) 제시	245

제4장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249

제1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251
1. 조례의 주요 내용	251
2. 개선방안	252
제2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방안	256
1. 현행 입법평가기준 주요내용	256
2. 개선방안	261
3. 정책효과 분석평가 모델(안) 제시	264
제3절 입법평가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제언	272
1. 입법평가 전담조직의 필요성	272
2. 타 시도사례 비교	272
3. 입법평가팀의 구성 및 업무분장	274

표 목차

[표 1] 지방의회 자치법규 보유수 (2012~2019)	8
[표 2] 입법평가와 정책평가 비교	10
[표 3] 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주체	12
[표 4] 광역의회 입법평가 조례 비교	18
[표 5] 국회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목차 체계	21
[표 6]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비교	28
[표 7] 평가대상 조례 사후 입법평가 총괄표	33
[표 8] 조례 개정 필요 총괄표	36
[표 9] 조례 통합 필요 총괄표	48
[표 10]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56
[표 11]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63
[표 1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70
[표 1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78
[표 14]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86
[표 15]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93
[표 1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00
[표 17]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08
[표 18]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15
[표 19]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22
[표 20]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29
[표 2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36
[표 22]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조례	143
[표 23]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50
[표 24]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58
[표 25]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66

[표 26]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	173
[표 27]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80
[표 28]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88
[표 29]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195
[표 30]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	203
[표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	210
[표 32]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217
[표 3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	224
[표 3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자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	231
[표 35]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개선안 제시 ...	237
[표 36]	타지자체 입법평가 위원 구성 비교	253
[표 37]	충남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총괄표	254
[표 38]	충남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258
[표 39]	충남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개선방안 총괄표	263
[표 40]	조례 정책효과 분석평가표(안)	269
[표 41]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적용 예	270
[표 42]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예	271
[표 43]	사후입법평가팀 사무분장 1안	274
[표 44]	사후입법평가팀 사무분장 2안	276
[표 45]	제1안과 제2안의 비교	277
[표 46]	충청남도 조례 현황 (2020. 8월말 기준)	278
[표 47]	21년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자치조례 목록	280
[표 48]	21년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법령위임조례 목록	286
[표 49]	조례입안모델(안) 세부사항	294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 25개 조례 시범평가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방분권형 국가로 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 특히 자치입법권 기능과 역할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9년 10월 30일부터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공포·시행 중으로 향후 정기적인 조례 입법평가 등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 제도가 실시될 예정임
- 그러나 조례 제정 시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아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시범운영 및 입법평가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조례 입법평가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입법평가기준을 토대로 시범평가 대상 조례를 평가하고, 시범평가 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충청남도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조례 입법평가제도 검토
 - 입법평가제도 선행연구 분석
 - 입법평가제도 현황 및 체계 분석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 25개 시범평가 대상조례 입법평가
 - 평가대상 조례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평가
 - 평가대상 개별 조례의 평가의견 제시(제·개정, 폐지, 통폐합 등)
- 도·교육청 소관 전체 조례 대상 통·폐합 사례 발굴
 - 통·폐합 조례 사례 발굴 및 통합(안) 제시
 - 통·폐합 조례 입안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안) 개발
- 충청남도 조례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 평가기준 및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개선방안
 - 조직, 인력, 기능과 역할 및 운영방안

2.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조례 입법평가 관련 문헌 검토
 - 타시도 입법평가 연구보고서 검토
- 사례 조사
 - 입법평가제도 운영사례 조사
 - 입법평가기준 운영사례 조사
- 자료 분석
 - 집행부 소관부서 작성 제출 자료
 - 대상조례 근거 법령 및 유사 조례

제2장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

제2절 입법평가제도 현황

제3절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분석



제1절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

1.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중요성

-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과 동시에 출발하고 있음. 제헌헌법 제97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고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고 명시함
- 이후 1949년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음
-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으로, 지역적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며,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지역의 사무에 관해 규율하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함
-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현행 헌법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을 직접 부여받음으로써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과는 구별됨
- 자치입법 주체로서의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짐
 -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자치의 주체인 지역 주민의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참여 과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국회 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법공백을 예방·보완할 수 있음
- 현재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3,756명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규칙은 110,147개임
- 연도별 조례의 보유현황은 2012년 58,531개에서 2019년 85,414개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지방의회 자치법규 보유수 (2012~2019)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개)	81,954	85,695	87,163	91,243	95,002	99,795	103,679	110,147
조례(개)	58,531	61,894	63,476	67,549	71,220	75,708	79,288	85,414
규칙(개)	23,423	23,801	23,687	23,694	23,782	24,087	24,391	24,733

(자료 : 행정자치부, 2020 행정자치통계연보)

2. 조례 입법평가의 목적 및 기능

- 입법평가는 입법에 대한 평가, 즉 입법적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함
- 즉, 입법평가는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면, 법령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입법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규범의 수용성,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는 적절한 예방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사후적으로는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을 지향할 수 있음
- 지방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조례 입법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의 성숙과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제도가 실시되어야 함
-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원활히 제 기능을 할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제고와 조례의 합리화,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 나아가 과도한 입법에 대한 자기 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입법평가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후평가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사전평가의 경우 조례안의 초안 단계에서부터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평가는 본질적으로 예측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점, 입수된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
 - 중간평가는 조례안의 초안단계에서 초안에 대한 평가 또는 일부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병행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 변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등의 추이를 예측해 입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방안을 준비할 수 있음
 - 사후평가는 조례 시행 이후 시점에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실증적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검증하며, 이를 통해 조례의 개정과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3. 입법평가와 정책평가

- 입법평가(Legislative Evaluation)는 현행 법률과 제개정 법률안을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보다 나은 법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함
-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함. 정책평가는 정책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의미함
- 입법평가는 입법의 품질향상 및 현실적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규범 그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규범에 기반하여 시행되는

정책의 성과 등을 분석해 입법에 반영하기도 하나 최종적으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규범적 판단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구성됨. 이에 반해 정책평가는 정책 성과의 향상이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그 대상은 산출결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측정과 분석이 가능한 영역으로 체계화되어있음

- 따라서 입법평가와 정책평가는 평가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과학성 추구라는 목표에서는 상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양자 간의 기본적인 성질의 차이로 평가의 대상과 방법은 달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2] 입법평가와 정책평가 비교

구분	정책평가	입법평가
의의	(협의) 정책의 성과 및 결과를 평가 (광의) 정책성과 향상을 위해 정책 형성과정에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것	(협의) 입법 그 자체를 평가 (광의) 제정의 전 과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의 평가, 즉 법령평가는 물론 입법자평가·입법과 정평가와 각종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치 달성도를 평가 - 조직의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정부전략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학습 - 정책의 관리 감독을 위한 순응·책임성 확보 - 학문적 지식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의 합리화를 위한 절차로서 과도한 규율을 제거하고 자원의 명확화와 손실을 제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간소하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체계 도모 -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 - 결과와 집행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측정 - 행정적·재정적·사법적 통제의 도구 - 입법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입법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과 아울러 비판적인 기능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내부평가·외부평가 - 형성평가·총괄평가 - 사전평가·과정평가·사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중간평가·사후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평가방법: 정책의 투입, 산출 및 효과를 객관화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등 평가 - 질적 평가방법 : 계량화되지 않는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분야 및 평가 전문가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여 정책과정 및 성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 입법평가(입법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기 전의 평가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평가 - 사후적 입법평가(개선을 위한 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시행하는 법령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결과 측정, 분석이 가능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분석 + 규범적 가치판단

(참고: 강현철,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제2절 입법평가제도 현황

1. 입법평가 조례 기본 현황 및 체계

1) 현황

- 지자체들의 조례 입법평가 조례들은 대체로 비슷한 입법목적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 입법목적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도민)의 권익신장 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음
- ‘좋은 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분석의 토대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표방함
- 현재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8곳임
- 기초지자체 중 조례 입법평가를 제도화한 곳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충남 당진시 등 23곳임

2) 체계

-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고, 주로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조례 입법평가 주체를 집행부(단체장)로 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며, 위원회 인적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 조례 제정 주체(입법부)가 아닌 외부평가의 성격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 의회의 입법행위를 집행기관이 평가한다는 것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큼
- 조례 입법평가 주체를 입법부(의회)로 하는 경우 의회 산하에 입법평가위원회 두고 위원회 인적 구성에 집행부 측 인사를 포함하지 않고 운영함
- 입법부가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능동적 자기 시정의 기회와 결과를 가질 수 있음
 -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는 관점 따라 입법평가 역시 의회의 입법권 영역 안에서 이해
- 입법평가 조례들은 입법평가의 요소로서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3] 자치단체별 조례 입법평가 주체

구분	집행부(단체장) 입법평가	입법부(의회) 입법평가
광역 지자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기초 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집행부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 광역의회 입법평가 조례

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 입법영향분석 조례 목적

-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과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입법 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 의미나 개념은 다르지 않음

■ 대상 및 적용범위

- 입법평가 대상으로 제정 중 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함
 - ※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최초 사후 입법영향분석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중에 시행하도록 부칙 제2조 별도로 규정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과 사후 입법 영향평가의 대상 조례에서 제외

■ 입법영향분석의 주체

-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 도의회의원 7명, 입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으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석

-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입법부(도의회) 외 집행부가 제출하는 조례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자치법규 전체의 평가가 가능함
- 사전 입법평가와 사후 입법평가를 나누어 별도의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부개정 조례는 사전 입법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대상 및 적용범위

-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중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함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 입법평가의 주체

-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으로 도의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변호사·교수·연구원·입법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석

- 입법평가 주체인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으로 교수, 연구원, 입법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등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가 구성원으로 활동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음
- 입법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강원도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대상 및 적용범위

- 입법평가 대상으로 제정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함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인사 또는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 입법평가의 주체

-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으로 도의회의원, 변호사·교수·입법전문가,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석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음
- 입법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 및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에 응하여야함

4)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입법평가 조례 목적

- 울산광역시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대상 및 적용범위

- 입법평가 대상은 조례 시행 후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함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 입법평가의 주체

-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으로 시의회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변호사·교수·연구원·입법전문가,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함

■ 분석

-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기능은 입법평가 수행 권한이 아닌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 권한임
-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음

[표 4] 광역의회 입법평가 조례 비교

구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평가 목적	· 조례 실효성 확보 · 의원 입법 활동 지원 · 도민 권익증진	· 조례 실효성 확보 · 도민 권익증진	· 조례 실효성 확보 · 도민 삶의 질 향상	· 조례 실효성 확보 · 의원 입법 활동 지원 · 도민 권익증진
평가 방식	· 사전 입법평가 · 사후 입법평가	· 사후 입법평가	· 사후 입법평가	· 사후 입법평가
대상 및 적용범위	· 제정 중 조례 · 전부개정 2년경과 조례 · 입법평가 4년경과 조례	· 제정조례 · 전부개정 2년경과 조례 · 입법평가 4년경과 조례	· 제정조례 · 전부개정 2년경과 조례 · 입법평가 4년경과 조례	· 시행 후 2년경과 조례 · 입법평가 4년경과 조례
평가 주체	·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사후 입법평가 기준)	·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 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회 기능	· 입법영향분석 · 입법영향분석 기준 수정 · 심의	· 입법평가 · 입법평가 분석자료 변경	· 입법평가 ·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입법평가 분석자료 설정 및 · 변경	· 입법평가 ·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 마련 · 입법평가 제도개선
평가 기준	· 6개 평가항목 23개 세부항목	· 8개 평가항목 30개 세부항목	· 5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은 · 위원회에서 결정	· 7개 평가항목 29개 · 세부항목
평가 용역	· 입법영향분석 용역 실시 · 가능	· 입법평가 용역 실시 가능	· 입법평가 용역 실시 가능	· 입법평가 용역 실시 가능
평가자료 제출요구 등	· 조례 발의 의원 및 제출 · 집행부 의견 청취	· 대상 조례 소관 부서 · 자료제출 요구 · 전문가 자문	· 조례 발의 의원 및 제출 · 집행부 의견 청취 및 · 자료 제출 요구 · 전문가 자문	· 조례 소관 부서 의견청취 · 관계 부서 자료 요구 · 전문가 자문
평가 결과 활용 등	·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표 · 상임위 또는 집행부 통보 및 · 적극 반영 · 조례개정 또는 폐지공약포상	·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표 · 상임위 또는 집행부 통보 및 · 적극 반영	·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표 · 상임위 또는 집행부 통보 및 · 적극 반영	·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표 · 상임위 또는 집행부 통보 및 · 적극 반영

3. 국회 입법평가 제도

1) 개요

- 다수의 국가들이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국내에서도 외국의 입법평가 제도 사례의 소개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부터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국회 입법평가 제도는 ‘좋은 입법의 원칙’에 기초한 ‘좋은 법률 만들기’의 도구임
 - 좋은 입법의 원칙 : 필요성, 비례성, 효과성, 효율성, 집행가능성, 정당성, 명료성, 접근가능성, 일관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객관적 증거에 기반, 적절한 변경을 통한 최신성 유지 등을 갖추어야 함
- 국회 입법평가제도의 목적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 검토해야 할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안의 비교·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우며, 입법품질에 대한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함으로써, 입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12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발간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까지 10년간 총 66건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행함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법영향 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자료와 분석방법,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입법영향분석, 입법개선방안의 제시 등의 틀로 구성



2) 사후 입법평가의 주요 체계

(1)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 입법영향분석의 배경에는 입법배경과 입법목적을 서술함
-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으로 해당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이 왜 필요한지 서술함

(2) 자료와 분석방법

- 입법영향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출처, 성격 등을 서술함
- 연구 질문 또는 분석체계에 따른 분석방법을 서술함
 - 어떠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통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3)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 해당 법률 시행의 효과, 부작용 여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받음
- 필요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 인터뷰(FGI) 등을 시행

(4) 입법영향분석

-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법률의 입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조치, 그에 따른 결과 등을 확인함
- 입법목적에 정량적 지표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지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입법목적이 추상적이거나 평가지표도 정성적이어서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함

(5) 입법 개선방안의 제시

-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에서 나타난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입법의 효율성, 부작용 여부, 시행상의 어려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참고해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함

[표 5] 국회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목차 체계

2012년 제정 목차	2015년 제정 목차	현행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분석 내용 및 결과 1) 법체계성 분석 - 헌법적합성 분석 - 내정 일관성 분석 - 다른 법률과의 관계분석 - 비교법적 분석 2) 입법영향분석 4.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I. 분석대상 입법의 개관 1. 분석대상 법률 2. 입법 배경 및 이유 3. 심의 경과 4. 입법의 주요 내용 II. 입법영향분석 점검표 1. 법체계적 분석 2. 정치·행정 영향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사회·문화 영향분석 5. 규제영향분석 6. 부패영향분석 7. 기타 영향 분석 I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IV. 입법영향분석 V. 결론	I.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과 목적 다. 심의 경과 라. 주요 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가. 제도의 개요 나. 분석의 필요성 3. 자료와 분석방법 II.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의견조회 내용 2.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지 III. 입법영향분석 1.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분석 가. △△에 미치는 영향 2. 그 밖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가. ○○에 미치는 영향 3. 법체계적 분석 IV. 결론

3) 분석

- 입법평가 제도의 목적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서로 다르지 않음. 입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좋은 규범’을 만들어 내는데 있음. 따라서 법령 입법평가 방법을 조례 입법평가 방법의 기준으로 참고가 가능함



- 다만, 법령의 경우 상위 법률과의 관계는 헌법에의 부합만이 문제될 뿐이나, 조례의 경우 헌법은 물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특히 위임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규율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지 등 상위법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의 차이성이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령 입법평가 제도와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체계를 비교할 때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 실질적 운영 방식에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령 입법평가는 국회법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법안심사의 참고자료로만 시행되고 있음
- 법률 시행의 효과 평가와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확인함
- 국회 입법영향분석 전담부서 및 인력확보 필요성 진단으로 (제도화 필요성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

제3절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분석

1. 경기도 입법평가기준

- 경기도 조례는 제4조에서 입법평가 기준으로 ‘사전 입법영향분석’과 ‘사후 입법영향 분석’ 기준을 별표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래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생략

- 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의 입법영향 분석항목은 ①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② 유효성 및 효율성, ③ 공평성, ④ 주민의견 수용성, ⑤ 지원의 적정성, ⑥ 조례의 필요성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입법 근거 및 법적합성은 세부항목으로,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위임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는가(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제외),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가,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유효성 및 효율성은 세부항목으로,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등으로 분석

- 공평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등으로 분석



- 주민의견 수용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조례의 체계나 사용된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는가 등으로 분석
- 지원의 적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필요성은 세부항목으로,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등으로 분석

■ 특징

- 경기도 입법영향분석 지표는 2019년 6월 기존 입법영향 분석항목에 따른 세부항목과 입법영향 분석척도(지표) 등을 전면 개편하여 보완됨

2.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기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7조에 따라 별표로 입법평가 분석지표를 두고 있음
- 사후 입법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으로 ① 조례의 입법근거 및 적법성, ② 조례의 실효성, ③ 조례의 공평성, ④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 ⑤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⑥ 제주현실 부합성, ⑦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⑧ 종합의견 등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조례의 입법근거 및 적법성은 세부항목으로,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 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실효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공평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등으로 분석
- 제후현실 부합성은 세부항목으로,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를 분석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등으로 분석
- 종합의견은 세부항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등으로 분석



■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영향분석 기준표는 2018년 2월 기존 입법영향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항목과 분석척도(분석 및 평가) 등을 전면 개편하여 보완됨

3. 강원도 입법평가기준

- 강원도는 제4조에 따라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함
- 사후 입법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으로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②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③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위원화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⑤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조례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예정

■ 특징

- 강원도 입법평가 세부적인 기준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음

4. 울산광역시 입법평가기준

- 울산광역시 제8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함
- 사후 입법평가 지표의 세부항목으로, ① 조례 제정 근거, 위임근거의 적정성, 위임범위에 따른 적정 제개정 여부,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유사) 법령(제도)이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폐지) 폐지여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등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②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여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통합 필요 여부,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 여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 현황,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의 이행, ③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④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 여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조례의 체계, 사용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⑤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⑥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 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위원회 위원 구성 적정 여부, ⑦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등의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의 이행으로 12가지 하부항목으로 ㉠ 센터 등 설치, ㉡ 실태조사, ㉢ 교육 홍보, ㉣ 인증기관 등 지정, ㉤ 시설 등 대여, ㉥ 추진실적 성과평가, ㉦ 기관교류, ㉧ 재정지원 등, ㉨ 구매실적 등, ㉩ 포상, ㉪ 허가 승인, ㉫ 위탁 등으로 분석

- 조례 시행은 2021년 7월 1일 예정

■ 특징

- 울산광역시 입법평가 기준표는 다른 자치단체의 평가표(기준표)와 같이 조례 세부 평가사항을 척도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기술해 작성하도록 구성함

[표 6]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비교

※ 충남 입법평가와 다른 기준 밑줄 표기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1. 입 법 의 근 거 및 적 법 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인가?	1. 조 례 의 입 법 근 거 및 적 법 성	(1-1)위임조례인가 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위임 조례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근거가 올바른 가?		(1-2)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 가?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재개정되었는가?		<u>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 는가?(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제외)</u>		(1-3)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재개정되었는 가?
	4) 조례 재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1-4)조례 재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 었는가?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 임이 있는가?		관련 법령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가?		(1-5)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 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이 있는가?
			<u>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 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 순이 발생하고 있는가?</u>		
2. 조 례 의 실 효 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2. 유 효 성 및 효 율 성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 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2. 조 례 의 실 효 성	(2-1)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 할 필요가 있는가?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시행이 되고 있는가?		(2-2)이 조례와 유사 또 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u>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u>		(2-3)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 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 가?		<u>(2-4)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u>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2-5)조례에서 부여한 책 무와 여러 추진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3.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3. 공 평 성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3. 조 례 의 공 평 성	(3-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불합리한가?		(3-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4.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4.주민 의견수용성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4.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	(4-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4-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4-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4-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5. 지 원 의 적 정 성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5. 조 례 에 따른 지원의 적 정 성	(5-1)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5-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한가?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5-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5-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u>현실 부합성 관련 항목 부재</u>		6. 제주현실 부 합 성	(6-1)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7.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u>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가항목 부재</u>		7.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1)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한 위원회 인가?				(7-2)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7-2)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7-4)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7-5)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8.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6. 조례의 필요성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8.종합의견	(8-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8-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8-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8-4) 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제3장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1절 평가대상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의견

제2절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결과

제3절 조례 통·폐합 방안 검토



제1절 평가대상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의견

1. 총괄

- 총 25개 시범평가 대상 조례 검토 결과
 - 폐지권고 1개, 개정필요 12개, 통합필요 3개, 정상추진 9개임

[표 7] 평가대상 조례 사후 입법평가 총괄표

연 번	구분	조례명	시행일	소 관 상임위	소관 부서	입법평가 결과
1	제정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2009.12.30. ※2015.9.30. (일부개정)	기획경제 위원회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정상 추진
2	제정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2012.6.20. ※2020.1.1. (일부개정)	기획경제 위원회	경제실 투자입지과	통합 필요
3	전부 개정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2020.7.10.	기획경제 위원회	경제실 경제정책과	정상 추진
4	제정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009.6.1.	행정문화 위원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개정 필요
5	제정	충청남도 한류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7.30.	행정문화 위원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정상 추진
6	제정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2.30.	행정문화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정책과	정상 추진
7	제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6.6.10. ※2020.4.1. (일부개정)	행정문화 위원회	공동체 지원국 사회적 경제과	정상 추진
8	제정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0.	행정문화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유산과	정상 추진
9	제정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5.9.10.	행정문화 위원회	공동체지원 국 사회적경제 과	개정 필요
10	제정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9.4.15.	복지환경 위원회	저출산보건 복지실 사회복지과	개정 필요
11	제정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7.10. ※2019.5.30. (일부개정)	복지환경 위원회	기후환경국 기후환경 정책과	개정 필요



연번	구분	조례명	시행일	소관 상임위	소관 부서	입법평가 결과
12	제정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5.10.30.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노인복지과	개정 필요
13	제정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016.9.30.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필요
14	제정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25. ※2015.2.23. (일부개정)	농업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국·농산물유통과	통합 필요
15	제정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2.22.	농업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국·농산물유통과	개정 필요
16	제정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2016.6.30.	농업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수산지원과	정상 추진
17	제정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	2013.9.2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자연재난과	정상 추진
18	제정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16.4.1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통합 필요
19	제정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6.10.1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기후환경정책과	개정 필요
20	제정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1993.12.27. ※2020.10.5. (일부개정)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축교통국·건축도시과	폐지 권고
21	제정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위)	2001.3.30.	교육위원회	기획국·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22	제정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23.	교육위원회	기획국·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23	제정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15.4.10.	교육위원회	기획국·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24	제정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5.12.30. ※2020.6.10. (일부개정)	교육위원회	기획국·교육혁신과 (교육청)	정상 추진
25	제정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장보좌 지원 및 역량 강화 여부에 관한 조례	2016.5.1.	교육위원회	기획국·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2. 유형별 검토의견

1) 폐지 권고 (1개) :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p>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제5조 자금운용, 제6조 자금의 신청, 제7조 용자 및 보조 조건 등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는 100% 농협에서 용자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 주택개량대상자를 신청 받아 농식품부에 송부하는 간단한 행정 역할만 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
-------------------------	---

2) 개정 필요 (12개)

[표 8] 조례 개정 필요 총괄표

연 번	구분	조례명	시행일	소 관 상임위	소관 부서	입법평가 결과
1	제정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009.6.1.	행정문화 위원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개정 필요
2	제정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5.9.10.	행정문화 위원회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개정 필요
3	제정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09.4.15.	복지환경 위원회	저출산보건 복지실 사회복지과	개정 필요
4	제정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7.10. ※2019.5.30. (일부개정)	복지환경 위원회	기후환경국 기후환경 정책과	개정 필요
5	제정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2015.10.30.	복지환경 위원회	저출산 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개정 필요
6	제정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2016.9.30.	복지환경 위원회	여성가족 정책관	개정 필요
7	제정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2.22.	농업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국 농산물유통 과	개정 필요
8	제정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6.10.11.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기후환경 정책과	개정 필요
9	제정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위)	2001.3.30.	교육위원회	기획국 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10	제정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23.	교육위원회	기획국 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11	제정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15.4.10.	교육위원회	기획국 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12	제정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2016.5.1.	교육위원회	기획국 교육혁신과 (교육청)	개정 필요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 일부 조문에서 표기상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10 조	제10조(수당 등)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순 명칭 변경

(2)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조직갈등”을 추가하여 조례의 개정 필요함 (예) 3. 조직갈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의 조직 갈등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3 조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생략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조직 갈등 <신설>	갈등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간의 갈등 발생 시 해결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 제5조에서 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개정이 필요함	
구분	현재 명칭	개정 후 명칭	개정 사유
제 5 조	②(생략)~충청남도사회 복지위원회~	②(생략)~충청남도사회 보장위원회~	단순 명칭 변경

(4)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div>행정문화위원회</div> <div>소관</div>	<div>○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div> <div>- 본 조례 부칙 제2조(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 규정)에 의거 2022년 6월 30일까지 서해안기후 환경연구소의 재단법인화로 추후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div>
<div>개정 사유</div>	
<div>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에서 분리 독립되므로 조례 개정 불가피함</div>	

(5)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p> <p>- 본 조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맞게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노년세대의 범위(50세~65세)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확대 적용의 적극 검토가 요구됨</p>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 2 조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45세 이상 70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0세를 젊은 노인으로 구분 하기도 하고, 40대 중반을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2조 조문에서 대상을 45~70세로 확대 검토 필요



(6)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p> <p>-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모호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자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p>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7조	<p>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해야 한다.</p> <p>...</p> <p>3. 전문인력 양성 (이하 생략)</p>	<p>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해야 한다.</p> <p>...</p> <p>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p> <p>가. 관련 교육과정 이수</p> <p>나.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이하 생략)</p>	<p>청소년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의 명시를 통한 명확한 자격요건이 필요함</p>

(7)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p>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제5조에서 도(산하기관 포함)의 각종 행사에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발생과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등이 필요함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조례명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제 1 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제 5 조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삭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발생과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발생



(8)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p>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p> <p>-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제1항 제1호에서 최대 관람객 숫자를 3천 명에서 1천명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관람객 수(500명~3,000명)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p>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3 조	<p>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p>	<p>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p>	<p>법령 개정에 의해 변경</p> <p>「공연법」 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19.11 법률 개정으로 변경됨</p> <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 제66조의11 '17.01 개정으로 조 이동</p>

제 10 조	<p>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생략)</p> <p>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 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p>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생략)</p> <p>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 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p>안전관련 자격증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자격증 범위의 명확한 개정 필요</p>
--------	---	--	---

(9)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조례 제4조의 ①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생략)~운영영에 (“영”자 1개 삭제) (이하생략)~ - 조례 제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3조”를 “제21조”로 변경 - 조례 제2조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의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내용의 삭제가 필요하나 지정·운영에 대한 내용은 필요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거나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삭제하고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으로 변경
----------	---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조 조문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에서 "제21조"로 조문 변경
제2조	제2조 (지정·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생략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2)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조문 변경
제4조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순 표기 실수 "영"자 1개 삭제

(10)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 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1조 및 제122조”에 관련 조문이 있어 이로 수정</p>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8 조	<p>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및 제 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상위법 관련 조문 변경



(11)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교육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p> <p>- 본 조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제7호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을 “도·농 교육 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단순 농어촌으로의 유학이 아닌 도·농 학생 교류를 통한 작은 학교의 활성화 모색이 필요</p>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4 조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도·농 교육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낮아 보임. 오히려 도·농간의 교육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학생들의 이해의 폭 확대와 서로의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p>

(1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교육위원회 소관	<p>○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p> <p>- 본 조례 제6조 조문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가 충돌하여, 조례 제정 목적상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역기능예방 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 절차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충돌 부분 해소가 필요함</p>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 6 조	<p>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구매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품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통합관리서버는 제외한다.</p> <p>1. 평가비율 : 정량평가(90%), 가격평가(10%)</p> <p>2. 정량 경영평가 : 10% (경영상태, 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 경험(실적))</p> <p>3. 정량 기술평가 : 80% (이하 생략)</p>	<p>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이하 생략)</p>	<p>본 조례 제6조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충돌되어 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내용 개정</p>



3) 통합 필요 (3개)

[표 9] 조례 통합 필요 총괄표

연 번	구분	조례명	시행일	소 관 상임위	소관 부서	입법평가 결과
1	제정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2012.6.20. ※2020.1.1. (일부개정)	기획경제 위원회	경제실 투자입지과	통합 필요
2	제정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25. ※2015.2.23. (일부개정)	농업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국 농산물유통과	통합 필요
3	제정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16.4.11.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통합 필요

(1)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p>기획경제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p> <p>– 본 조례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로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한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신규로 신청된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상생산업단지로서 정주계획의 적합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와 통합 검토가 필요함</p>
-----------------------	---

(2)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p>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p> <p>- 본 조례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7월 28일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본 조례와 내용·성격이 유사해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p>
------------------------	---

(3)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p>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p>	<p>○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p> <p>- 본 조례 제1조(목적), 제4조(책무) 등 일부 규정이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여 조례의 통합 검토가 필요함</p>
-------------------------	--



제2절 상임위별 소관 조례 검토결과

1.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 본 조례는 자치조례로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과 관계되어 있으며, 2009년 12월 30일 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례 제4028호로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역주민의 발명을 북돋우고 산업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조례로 적합함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는 제4조에 충청남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임
- 도는 지역지식재산 기반 진흥을 위해 △충남365발명의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교육 △발명퀴즈대회 △충남IP컨퍼런스 등의 지원사업과 앞으로의 본 사업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 있음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는 △지식재산 창출 진흥, △지식재산 보호 진흥, △지식재산 활용 진흥, △지식재산 기반 진흥, △신지식재산 진흥 사업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비용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조례는 시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 차별적인 조항은 없음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09.9.30.~2009.10.19.)을 두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침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실시,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전시회 개최,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업에는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지원 △발명진흥행사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 운영 등 총 17건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재정지원 대상이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09년 12월 30일 제정 후 3번의 개정작업을 거쳐 2020년 9월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 주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함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남녀 성별 위원수의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있음
- 2018년 이후 위원회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충청남도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종합적인 지원 및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해 조례의 현행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10]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시(16개)	기초(24개)
서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북구
대구	대구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달서구
인천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광산구, 북구
대전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경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수원시, 시흥시
강원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양구군, 정선군
충북	충청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전북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군산시
전남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곡성군, 담양군
경북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안동시, 포항시
경남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거제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2)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2년 6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2월 30일까지 5번의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조례 제 4631호로 시행되고 있음
- 본 조례는 자치조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관계되어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도는 2012년 2월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정주환경 형성 미흡에 따라 충남 상생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산업단지에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정주여건을 개선한 산업지역 조성으로 근로자 지역정착 유도
 - 본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다만,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성격상 중복 되므로 통합 검토필요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다만, 조례 제3조(책무)에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환경 조성을 포함하여 제4조(종합계획) 수립하여 충청남도 거주 외국인 70,671명(2019년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자료)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
- 본 조례에서 외국인·외국투자기업,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게 되면 충청남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조문과 중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충청남도는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등 9개 시·군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긍정적 성과 가시화
- 다만, 천안시의 신규사업(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보령시의 2019년도 계속사업 2건(웅천산단 내 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관창산단 공동기숙사 설치)은 예산부족 및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됨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충청남도는 관내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군 보조금 지원 사업에 있어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2.03.30.~2012.04.19.)을 두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생성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7조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7~2020년 기간 중 매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재정 지원 및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시장·군수가 단위과제(사업) 발굴 후 도에 집행 가능 및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충청남도가 2012년 6월 30일 제정 후 매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 평가 및 사업 선정으로 근로자의 정주성 제고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함
- 본 조례 제16조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계획 수립·심의는 조례와 관련된 개별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와 일부 내용이 동일한 것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정주여건을 구체화 및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녀(남 17명, 여 7명) 성별 위원 수는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있음
- 다만, 당연직 위원이 모두 남성임으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41%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 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음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의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은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와 우수한 젊은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여 현재 충청남도에만 7만 명 이상이 기업투자(D-8), 비전문 취업(E-9), 방문취업(H-2), 영주권(F-5) 등의 비자로 도내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산업단지 내 정착을 위한 지원검토가 필요함
-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그 성격이 비슷하여 통합 검토가 필요함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 본 조례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로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16조 제2항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한 충청남도 지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신규로 신청된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상생산업단지로서 정주계획의 적합성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와 통합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3절 참고)

[표 11]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광역(0개)	기초(0개)
	충남 외 없음	



3)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 본 조례는 1997년 11월 10일 제정되어 2번의 전부개정과 17번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충청남도 조례 제4758호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조례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도민의 권리가 보장될 것임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은 없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음
- 본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정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소비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것임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도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본 조례는 제16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지원 사업, 충청남도 소비생활센터운영 등 소비자 단체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집행함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도민의 소비자권리 보장을 위해 매년 소비자단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9 충남소비자 대회 및 충청남도 소비자 권리헌장 선포식'을 갖는 등 본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녀 성별 위원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있음
- 위원회는 2018년 이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음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소비자 권익 향상과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유지가 필요함
- 본 조례는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로 운영되다 '20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 증진 조례」로 전부개정 됨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12]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6개)	기초(63개)
서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조례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대전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기본 조례	
경기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포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동두천시
강원	강원도 소비자 조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정선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천시, 충주시, 청주시
전북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군산시, 임실군
전남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고흥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장성군
경북	경상북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구미시, 포항시
경남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거창군,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계가 있으며 2009년 6월 1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3418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통일미래 대비 남북 주민 간 상호 소통의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 있음
- 충청남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추진 중인 취업지원, 상담 치유사업, 인식개선포럼, 의료지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등의 가시적 효과 있음
-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거주지 종합만족도 85.08점으로 나타남 (2017년 대비 13.58점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만족도 목표 76점)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는 도내 8개(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있어 각 사업 분야별로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현 북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는 문화 충돌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충청남도 도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본 조례 제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취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2개 사업(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리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2018년~2019년 3개 사업(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충청남도가 2009년 6월 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조례로 지원대상, 지원범위, 협의회구성, 지원 단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여 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충남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녀 성별 위원은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있음
- 위원회 회의는 2017년 3회, 2018년 1회, 2019년 4회씩 각각 개최되었음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체인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는 계속 설치·운영이 필요함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군사 분계선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들이 신속히 적응·정착을 하도록 지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나
- 조례의 개정 사유 : 본 조례 일부 조문에서 표기상의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제4조의 지원범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함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 조례의 개정 사유: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각각 변경 필요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10조	제10조(수당 등)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순 명칭 변경



[표 1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6개)	기초(151개)
서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조례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수성구
인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광주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대덕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횡성군
충북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조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구분	광역(16개)	기초(151개)
전북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남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5년 7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00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 지원임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는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가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 기여할 것임

- 충청남도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규정하여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조성 사업,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교육 등 위령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조례상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의 차별 등 비합리적인 조항은 없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6.10.~6.16.)을 두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 본 조례와 관련된 민원이 없고, 제정·개정·폐지 등의 요구가 없어 위령사업 지원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의 정서에 부합함
-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는 제5조에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은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고, 2016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한국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을 통해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충남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하는데 기여함. 다만, 조례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추모제 민간 보조 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추진 및 지원 확대가 고려되어야함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14]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시(15개)	기초(54개)
서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광주	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에 관한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김포시, 양평군, 여주시, 파주시
강원	강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전북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창군,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전주시
전남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문경시, 안동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경남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거창군, 김해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079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등에 따른 위임조례로 충청남도의 공예문화 산업 진흥과 우수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정됨
-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음
- 집행부 입법평가 기초자료에는 '자치조례'로 평가하고 있어 확인·정정이 필요함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충청남도가 도내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인정 문화상품 지정, △충남 공예상품 국내 전시판매전, △충청남도 공예품대전, △공예품 상품화 지원 사업 등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 차별 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7.20.~2015.8.10.)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어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공예품 지정에 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가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 조례 제4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 역량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충청남도의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참가로 판로개척 및 활성화에 기여하여 경제성과를 창출할 것임
- 본 조례는 공예품 관련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로 전시나 판매가 수월하므로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함
- 본 조례는 지원사업 또는 우수 공예품의 지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예심사위원회(제5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제2조(공예문화 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등)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등)와 규정사항 동일하게 정한 것은 기본계획수립부터 사업이 시작되므로 공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현실과 부합함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 제5조에서 조례로 공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전체 위원 6명 중 6명 전부를 남성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성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위원회 개최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2회씩 열리고 있으며, 회의록은 잘 보존이 되고 있음
- 위원회는 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과 인정문화상품 지정 사업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계속·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조례로 정한 공예심사위원회는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기능적 통합은 필요하지 않음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충남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공예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나 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지원정책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어 계속 지원을 위한 조례의 현행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공예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15]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6개)	기초(2개)
부산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청주시
전남	전라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북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6년 6월 10일 제정되고 1회의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가 있음
- 본 조례 제·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와 유관 조례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 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충남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및 ‘충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등이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6.3.29.~2016.4.7.)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1일 14시30분~17시00분까지 공주 충남연구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토론회를 가짐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11조에서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구체화 되어있음
- 조례 규정에 따라 설립한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함
-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인건비, 판로개척, 홍보 및 교육, 공공박람회 등과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6월 10일 제정하여 2020년 4월 1일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현실과 부합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구체화를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p>·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p>
<p>·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p>
<p>·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p>

[표 1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1개)	기초(24개)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동구, 동래구, 서구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울산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성남시, 오산시, 화성시
강원		동해시, 인제군
충북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전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		구미시
경남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창원시

	교육청	자치단체(8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6년 10월 2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78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른 조례로 동조 제2항 제5호 다·라목의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의 시책과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과 관계가 있으며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함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조례 제7조에 따라 연도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문화재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충청남도 지역 문화재 정책 환경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실효적임
- 충청남도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 문화재활용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등과 같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향교·서원의 지원 및 문화진흥 근거로 적합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8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6.8.12.~2016.8.19)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특정 주민이 아닌 전체 도민으로 사업효과가 배분되어 적정함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진정,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4조에서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구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4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본 조례 제2조(정의), 제4조(사업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향교·서원 활성화 및 보존계승을 위해 적정함
- 조례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2019년도에 각 사업별 예산을 집행함
 - * 2017년(10개 사업): △우리동네 문화 사랑방 충현서원(90,000), △보령향교에서 옛 문화를 만나다(67,000), △우리 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뿌리를 찾아서’(67,000),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42,600), △예와 충을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90,000), △돈암서원 禮힐링캠프(90,000), △예험! 부여선비 나가신다(41,800), △온고지신 문헌서원(50,200), △함께 넘어가는 결성향교(90,000), △예산향교에 예심이와 충심이가 떴다(41,800)
 - * 2018년(14개 사업): △청소년 마을여행-청소년 역사를 걷다(15,000), △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명재상 이야기(47,500), △읍성, 문화유전자를 찾다(42,500),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67,500), △근대거리에서 광복을 노래하다(72,500), △유유자적 사계 고택 체험(112,500), △익여채! 흥겨운 줄다리기, △우리의 세시풍속((30,000), △익병들이여! 일어나라!(65,000), △옛집에서 만나는 사랑방 이야기(17,500), △홍주천년, 홍주성 한바퀴(175,000), △충청도 양반, 서운고택을 엿보다(25,000),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대목장 생생체험(65,000), △롤루랄라♪ 충의사에서 놀아보자!(67,500), △대한독립만세-옥파이 종일(65,000)
 - * 2019년(8개 사업): △직산향교 역사문화를 품다(30,000), △충현을 담은 꿈꾸는 서원(104,000), △우리가족 이야기 족보 만들기 ‘나의 뿌리를 찾아서’(54,000), △선비의 기개(60,000), △돈암서원 예힐링캠프(138,000), △온고지신 문헌서원(68,000), △인문학의 요람, 결성향교(138,000), △예산향교에서 화양영화를 스케치하다(90,000)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10월 2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향교·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현실과 부합함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 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 교육기관인 향교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인 “서원”으로 현재까지 도에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의 지원을 통해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적합성, 실효성, 공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현행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17]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시(12개)	기초(54개)
부산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광주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향교·서원·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가평군, 김포시, 안성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강원	강원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충북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전북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장수군
전남	전라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경주시
경남	경상남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함양군

6)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0년 11월 10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10일 1번의 개정과 2014년 12월 30일 전부개정을 거쳐 충청남도 조례 제3943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 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능력 향상과 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공공갈등 사전예방’,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공공갈등관리 기반구축’,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지원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공공갈등 해결능력을 강화하는데 실효적임
- 충청남도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지원, 조사·연구, 매뉴얼 개발, 교육·홍보를 위해 본 조례 제18조에서 정한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4일 충남연구원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하여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충남연구원은 갈등관리 전문기구 지정 후 충청남도 및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등 시·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4.10.8.~2014.10.17)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의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 8월 7일 충청남도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 실무부서 간담회' 및 2014년 10월 22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발의 전부개정 조례안 합동검토제'를 개최함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특정 주민이 아닌 전체 도민으로 사업효과가 배분되어 적정함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 규정에 따라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받은 충남연구원 공공갈등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2018년 이후 실과 사업별 출연금이 아닌,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의 총괄 출연금으로 변경됨(충남연구원 출연금))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0년 11월 1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도내 시·군 공무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 제9조에서 조례로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체 위촉직 위원 15명 기준 남성 7명 여성 8명으로 성별 구성이 적정함
- 위원회 회의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정기적으로 매년 2~3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잘 보존되고 있음
- 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등 심의·자문, 도 및 시·군과 주민 간 갈등사항 관리 대상 등의 지정·조정을 위해 지속 운영 필요함
- 본 조례로 정한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기능적 통합은 필요하지 않음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 자율적 공공갈등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함
- 조례의 개정 사유 : 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조직갈등”을 추가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예) 3. 조직갈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의 조직 갈등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p>·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p>
<p>·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p>
<p>·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p>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3조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생략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조직 갈등 <신설>	갈등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간의 갈등 발생 시 해결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18]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광역(5개)	기초(52개)
서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광주		남구, 북구, 서구
대전		동구, 유성구, 중구
울산		동구, 북구, 중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강원		정선군
전북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군산시
경북		봉화군
경남	경상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해시, 사천시, 의령군, 창원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3.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09년 4월 15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3400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위임조례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위기가정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함
- 충청남도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사업 시행 후 보건복지부에서 충청남도의 시책을 모두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및 한시생계보호 제도 등을 신설하여 2009년 6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의 실직자, 급식비, 교육비 등의 지원예산에 관하여는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비로 대체하여 집행함
- 본 조례는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복지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위기가정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함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임조례로 조례 제정 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전체 도민으로 사업효과가 배분되어 적정함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2조에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부상, 화재, 구금시설에 수유,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상황이 어려워진 도민'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적절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최근 3년간(2017년 6,204,458천원, 2018년 6,790,000천원, 2019년 9,767,500천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09년 4월 15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조례 제5조(지원 절차 등) 제2항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위기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나, 향후 우리나라도 위기가정에 대한 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비하여 현재 조례는 유지가 필요함
- 조례의 개정 사유 : 본 조례 제5조에서 위원회 명칭이 상이하여 개정이 필요함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재 명칭	개정 후 명칭	개정 사유
제 5 조	②(생략)~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	②(생략)~충청남도사회보장위원회~	단순 명칭 변경

[표 19]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광역시(0개)	기초(0개)
	충남 외 없음	

2)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4년 7월 10일 제정되어 2번(2015.4.10., 2019.5.30.)의 개정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조례 제4517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설치하고, 주요연구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물환경연구센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제2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제10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건물 무상사용, 제11조 공무원 파견, 제12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정산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연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연구소의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2022년 6월 30일까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두어 설치함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천수만 해역 내 오염퇴적물에 의한 환경피해 개선방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등 2017년 주요연구 과제에서 정책지원, 전략, 수탁, 현안 등 다양한 도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총 34건(2017년 출연금 정산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2018년 71건(2018년 출연금 정산 보고서), 2019년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정책지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등 84건(2019년 출연금 정산 보고서)의 실효적 성과 발생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3.11.20.~2013.12.10)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진정,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는 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제5조 제1항과 제7조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7년~2020년 기간 중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33,000만원씩 확보하여 인건비, 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운영 등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4년 7월 1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의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존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의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조례 사후입법평가 항목에 의거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입법 근거의 적정성, 조례의 실효성·공평성·주민 수용성·내용의 적정성·현실 부합성 등에 이상이 없으나, 충남연구원과의 일부기능 및 역할 중첩에 따른 행정 낭비 등 효율성 저하가 문제 될 수 있음
- 조례의 개정 사유 : 본 조례 부칙 제2조(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규정)에 의거 2022년 6월 30일까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재단법인화로 추후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20]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광역시(0개)	기초(0개)
	충남 외 없음	



3)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본 조례는 2015년 10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040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일자리 발굴·알선 등을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로 도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는 조례 제3조에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공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비노년세대의 교육 및 상담, 문화·여가 활동 등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과 제7조의 센터운영비 지원 등 조례상 집행기관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신중년 욕구조사, 노후준비 및 사회공헌 현황조사, 사회공헌 만족도 실태조사 및 일자리 발굴, 인생설계교육 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된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다만, 예비 노년세대를 50~65세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로 보여짐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8.20.~2015.9.9)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어 주민정서에 부합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제2조 및 제4조에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6년~2020년 기간 중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사회공헌활동 추진, 경력형 일자리 추진 등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제2조)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고,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적정하게 부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5년 10월 3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는 노년세대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현실에는 부합하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0~65세 구간의 상·하향 폭을 좀 더 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12조에서 '센터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전체위원 9명중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성별 구성이 적정함
- 위원회 회의는 2017년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4회, 2018년~2019년에는 각각 2회씩 개최함
- 본 조례로 정한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속 설치·운영이 필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조례 사후입법평가 항목에 의거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입법 근거의 적정성, 조례의 실효성·공평성·주민 수용성·내용의 적정성·현실 부합성 등에는 이상이 없음
- 조례의 개정 사유 : 70세를 젊은 노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40대 중반을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2조 조문에서 대상을 45~70세로 확대 검토 필요. 본 조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맞게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노년세대의 범위(50세~65세)를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게 확대 적용의 적극 검토가 요구됨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2조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45세 이상 70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0세를 젊은 노인으로 구분 하기도 하고, 40대 중반을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로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조례 제2조 조문에서 대상을 45~70세로 확대 검토 필요

[표 21]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타 지자체 관련조례

구분	광역시(0개)	기초(1개)
경기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6년 9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6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가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 제정 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는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종합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본 조례 제3조에서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센터 내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2019년 충청남도 중기청소년(17~19세) 자해 및 자살실태 조사 등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된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9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6.8.12.~2016.8.20)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2016년 6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전문가, 공무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함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7조 제2항에서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는 제2조 및 제7조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전문인력 인건비, 청소년 트라우마 예방교육,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9월 3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으로 현실성에 부합함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 제8조에서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전체위원 16명중 남성 9명, 여성 7명으로 성별 구성이 적정함
- 위원회 회의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개최함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충청남도 도내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실효성이 있고,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조례유지가 적합하나
- 조례 개정 내용: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 3. 전문인력 양성'을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가. 관련 교육과정 이수나.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으로 개정
- 조례의 개정 사유 :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모호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자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7조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 3. 전문인력 양성 (이하 생략)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가. 관련 교육과정 이수 나.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이하 생략)	청소년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 제7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으로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의 명시를 통한 명확한 자격요건이 필요함

[표 22]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조례

구분	광역시(2개)	기초(5개)
서울		강서구
부산		중구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김해시



4.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3년 9월 25일 제정되어 1번의 개정(2015.02.23.)을 거쳐 충청남도 조례 제395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7월 28일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본 조례와 내용·성격이 유사해 보이므로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는 것 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6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유통 선진화 5개년 계획’(2014~2018)과 ‘충청남도 원예산업종합 계획’(2018~2022)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3.7.24.~2013.7.30)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산지유통시스템구축 간담회(2013.3.4.)와 산지유통시스템구축 실무협의회(2013.4.25.)를 개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음
- 조례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통합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일반주민에게 생소할 수 있는 유통전문용어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 정책과 전국의 산지유통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산지조직, 농업인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도지사는 농산물 관련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통합마케팅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전략품목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는 제5조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 지원 관련 규정에서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산지유통조직 육성, 충남오감(충남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안정장착 지원 등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집행함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제2조)은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3년 9월 25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에 부합함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입법 근거가 적정하며 차별적 규정이 없고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시책 사업 시행으로 충남의 산지유통발전에 기반이 되는 조례로서 그 동안 도 단위 연합마케팅 충남오감(충남도 농산물 공동브랜드)과 시·군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이 가능 하도록 시장교섭력을 높여 유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본 조례는 산지조직화와 통합마케팅 확대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원예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다만,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7년 7월 28일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음. 본 조례와 내용·성격이 유사해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23]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개)	기초(6개)
전북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전남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2)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2016년 2월 22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01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제1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18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10.27.~2015.11.13)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5년 10월 13일 '합동 검토회'를 개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다만, 조례의 명칭 및 제1조(목적)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필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진정,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6조 제1항에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7년~2020년 기간 중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 '우리술 활성화 사업', '전통주(인삼주) 시설 현대화 지원',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 프로젝트' 사업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함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제6조)은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2월 22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지역 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주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조례의 개정 사유 : 조례명과 제1조(목적)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등이 필요함. 본 조례 제5조에서 도(산하기관 포함)의 각종 행사에 지역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발생과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조례명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제 1 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 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 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 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으로 해당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 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제 5 조	제5조(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 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삭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발생과 다른 측면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발생



[표 24]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6개)	기초(2개)
부산		사하구
경기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원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충북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전북	전라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완도군
경북	경상북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6년 6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49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의 근거 규정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계획' 및 도내 잠수어업인 잠함병 치료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도지사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의거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의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조례 제3조에서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지정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차별의 내용: 본 조례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제5조(지정진료기관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를 홍성의료원 설치)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합리적인 사유: 서해안 양식어업 증가에 따른 잠수인력 증가와 보령시 오천보건 지소의 고압챔버(1기)가 중증치료를 못하고 있고, 중증환자 발생 시 통영(3시간 이상 소요) 이송치료·합병증 발생, 진료비, 이송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환경 구축으로 안정적인 치료 기반이 마련되어 도내 잠수어업인의 잠재질병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7.7.27.~2017.8.16)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서해안지역 잠수기 어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의료대책으로 ‘감압챔버’를 홍성의료원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2014.8.5.) 제기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홍성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치(2017.1.9.)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3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6조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는 제3조~제4조에서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집행함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6월 3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수민원을 반영하여 제정한 조례로 충남 현실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에 대한 잠재질병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의 근거 및 시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증환자와 잠재적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 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25]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3개)	기초(0개)
강원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경북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경남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3년 9월 25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380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위임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제2항과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 제8조에서 임원 및 회원은 자율방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3.03.08.~2013.03.31)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음
-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는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내용의 적절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3년 9월 25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위임조례로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활동 증가 및 유사시 방재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남 현실과 부합함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 제3조에서 '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법정연합회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 구성은 전체위원 15명 중 남성 14명(93%), 여성 1명(7%)로 구성되어 있어 성비의 균형은 맞지 않음. 성비가 적정하지 않는 사유는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도내 시·군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시·군의 연합회 회장 성비의 균형을 맞추기는 불가능함
- 위원회 회의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음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국가법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의 활동 증가와 더불어 도내 시·군에서 재해발생시 방재력을 집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서 시·도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조례임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최근 4년간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유사시 도 차원에서 방재인력의 집중운영이 가능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함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26]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4개)	기초(0개)
서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북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조례	
경북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6년 4월 1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20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과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법 제9조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나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의 의거, 기수립된 '제3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근거로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함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12.19.~2016.01.07)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합동검토제(2016.01.07.)’를 개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9조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별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충청남도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최근 3년간(2017~2019)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
- 본 조례는 제9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4월 1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등·하곳길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 조례의 개정 사유: 본 조례 제1조(목적), 제4조(책무) 등 일부 규정이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여 조례의 통합 검토가 필요함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27]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11개)	기초(92개)
서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중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인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광주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동구
경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이천시, 하남시
강원		속초시,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제천시
전북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고창군, 익산시
전남		고흥군, 곡성군,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구미시, 김천시, 의성군
경남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6년 10월 11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4121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6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을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 제정 후 유사한 제도인 ‘사전 안전영향평가제’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 모든 도(道) 주관 행사에 적용하여 안전 위해요인 차단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및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도는 ‘100주년 3.1절 기념식’, ‘바다지킴이 발대식 및 연안 대청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 대회’ 등 행사에서 ‘사전 안전영향평가제’를 기반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조례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6.02.12.~2016.03.03)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조례 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합동 검토제(2016.2.29.)’를 개최하였음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4조 제3항에 도지사는 기관 등에게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2019년 7월 10일 '제15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 대회' 행사에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무대 상부 철골부재 위 비가림 천막 누수발생', '분전반 외부전선 보호 미흡' 등의 조치를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함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절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10월 1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과 관계가 있는 자치조례로서 충청남도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축제활동 등 '옥외' 행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조례의 개정 사유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항 제1호에서 최대 관람객 숫자를 3천명이상에서 1천명이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관람객 수(500명~3,000명)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안전관련 자격증이 다양하고 범위가 광범위하여 자격증의 종류 또는 범위를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개정 필요함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3 조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법령 개정에 의해 변경 「공연법」 제11조제3항 → 제11조제4항 '19.11 법률 개정으로 변경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 제66조의11 '17.01 개정으로 조 이동
제 10 조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생략)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생략) ② 도지사는 주최자에게 해당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참가자 또는 관람객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안전관련 자격증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자격증 범위의 명확한 개정 필요



[표 28]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시(11개)	기초(40개)
서울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부산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중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주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구, 동구, 북구
대전	대전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덕구, 중구
울산	울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남구, 중구
경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파주시
강원		원주시, 횡성군
충북		청주시
전북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주시, 목포시, 해남군
경북	경상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영주시
경남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 본 조례는 1993년 12월 27일 제정되어 2번의 개정(2015.10.30., 2020.10.05)을 거쳐 충청남도 조례 제4807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본 조례에 따른 주택개량자금융자(농협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2012년 폐지된 후 2013년부터 농협 100%로 변경되어 조례의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5조에서 자금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필요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례 제2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에 따른 주택개량자금융자(농협 80%, 도비 10%, 시·군비 10%)가 2012년 폐지되어 2013년부터 농협 100%로 변경되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농식품부에 제공하는 단순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충남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 제5조 자금운용, 제6조 자금의 신청, 제7조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농촌주택개량 사업비는 100% 농협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에 주택개량대상자를 신청 받아 농식품부에 송부하는 간단한 행정 역할만 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함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종합의견

<p>·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p>
<p>·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p>
<p>·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p>
<p>·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p>

[표 29]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용 관리 조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구분	광역(4개)	기초(0개)
인천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강원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경북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경남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6.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1)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관계가 있으며 2001년 3월 3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2917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위임조례로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3조”를 “평생교육법 제21조”로 관련 규정 조항 변경 필요
- 조례 제2조의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소속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2008년 12월 1일 구성되어 충청남도교육감에서 충청남도로 소속이 변경됨
-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의 “충청남도교육 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규정의 삭제 필요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 시·군 지역(천안지역 평생학습관, 아산지역 평생학습관 등)에서 19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경비 징수 등 시행하고 있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는 제정 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00.10.27.~2000.11.15)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나 사용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4조에서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2017~2019)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성인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에 적정하게 집행함
-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제4조)은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01년 3월 30일 제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통해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위임조례로 충청남도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개정 사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단순 표기 실수로 인한 수정 필요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1 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평생학습관 (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조 조문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에서 “제21조”로 조문 변경
제 2 조	제2조 (지정·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생략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2)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조문 변경
제 4 조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및 지도)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순 표기 실수 “영”자 1개 삭제

[표 30]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12개)
부산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울산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북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3년 9월 23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3780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 지역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2017~2019)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위생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 본 조례 제6조에서 각급학교 석면조사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학교석면건축물조사 용역사업 실시’, ‘2019년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석면지도 검증’ 등 조례에 따른 관련 사업을 이행하였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 제정 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3.7.17.~2017.7.23.)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11조에서 교육감은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서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2014년 학교건축물 조사 용역사업, 2019년~2020년 석면지도검증 등 사업에 집행하였고,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3년 9월 23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2019년 기준 충청남도
도내 석면 보유학교는 889개교로 조례에 따른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은
현실에 부합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의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함
- 조례의 개정 사유 :관계 법령의 관련 조문 적용이 잘못되어 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관련 조문이 있어 이로 수정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p>·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p>
<p>·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평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p>
<p>·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p>	<p><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p>
<p>·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p>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8 조	<p>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p> <p>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상위법 관련 조문 변경

[표 3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조례명(9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강원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경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3)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5년 4월 10일 제정되어 충청남도 조례 제3984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 제9조 및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매년 ‘작은학교 지원계획’,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 ‘충남통학차량 지원계획’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 본 조례 제3조에서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 제2조에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조항 있음
- 차별조항: 제2조 학생 수 5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공립학교, 제9조 교직원 우대
- 차별의 합리적 이유: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적정 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 제정 시 1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02.06.~2015.02.23)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작은 학교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교육감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예산분담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례 제6조에서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근 3년간(2017~2019) 충남 작은 학교 운영지원, 충남 방과 후 학교 운영, 통학차량 지원 등 사업에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5년 4월 1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도내 작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므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함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 제11조에서 ‘작은 학교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전체위원 11명 중 남성 9명, 여성 2명으로 성별 구성이 적정하지 않음
- 적정하지 않은 사유: 조례로 정한 당연직 위원의 성별은 인사이동에 따라 유동적임
- 위원회 회의는 2017년~2019년 기간 중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위원회 회의록은 잘 보존되고 있음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농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폐교로 까지 연결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충청남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소규모 학교의 육성은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
- 2019년 기준 충청남도의 작은 학교는 165개교로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본 조례로 정한 ‘작은 학교 지원위원회’의 성비 문제는 당연직의 인사이동으로 유동 적이므로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높여서 성비균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의 개정사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을 “도·농 교육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4조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p> <p>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p> <p>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p> <p>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p> <p>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p> <p>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p> <p>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p> <p>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p> <p>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p> <p>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p> <p>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p> <p>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p> <p>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p> <p>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p> <p>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p> <p>7. 도·농 교육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p> <p>〈개정〉</p> <p>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이 낮아 보임. 오히려 도·농간의 교육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학생들의 이해의 폭 확대와 서로의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p>

[표 32]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7개)
경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전라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경남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헌법 및 근로기준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번의 개정(2020.06.10.)을 거쳐 현재 충청남도 조례 제4714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지역 사회 실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부터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함
- 본 조례 제8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헌법과 법에서 정한 노동안전, 근로기준, 직장 내 성희롱예방 등 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 제정 시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09.14.~2015.09.19)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없고,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주민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11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례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이나 지원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근 3년간(2017~20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에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도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점검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가 요구됨(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존중, 보호를 위해 조례의 현행유지가 필요함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표 33]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구분	교육청	광역시자체 본청(8개)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강원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북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경북		
경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본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관계가 있으며 2016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 충청남도 조례 제4125호로 현재 시행되고 있음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3조 및 교육기본법 제23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본 조례 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
 -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실효성

- 본 조례는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계획(2017~2018)’,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2019~2020)’을 시행함
- 본 조례 제7조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제8조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제10조~제12조 유해차단서비스 차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는 책무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음
- 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추진은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과의 충돌로 추진이 잠정 중단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의 실효성

·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공정성

- 본 조례에서는 장애인, 성별, 계층 또는 특정지역의 차별조항이 없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의 공정성

·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수용성

- 본 조례 제정 시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5.10.05.~2015.10.12)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입찰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됨
- 본 조례 제6조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충돌되어 발생하는 민원으로 조례 제12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잠정 중단됨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주민의 수용성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진정,소송 등)이 제기 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내용의 적정성

- 본 조례 제7조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지원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 무상 수리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례 제2조 제1항과 제4조에서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 예방 교육지원을 위한 대상·범위를 적정하게 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최근 3년간(2017~2019) PC지원 및 수리비 지원, 인터넷통신서비스 사업에 지원하였고,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음. 다만, 조례 제12조는 상위법과의 충돌로 개정이 필요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내용의 적정성

· 조례의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충남 현실 부합성

- 본 조례는 2016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는 조례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 충남 현실과 부합함. 다만, 일부 조례에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특정사업의 추진이 잠정연기 된 것은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해결 과제로 남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충남 현실 부합성

·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본 조례14조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전체위원 9명중 남성 4명, 여성 5명으로 성별 구성이 적정함
- 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0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함
- 본 조례로 정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강화방안 등 자문 필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종합의견

- 조례 제12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평가방식(제6조)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충돌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망차단 방식으로 유해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의 개정 사유 : 본 조례 제6조 조문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가 충돌하여, 조례 제정 목적상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역기능예방 관리를 위해 조례의 개정 절차를 통하여 상위법과의 충돌 부분 해소가 필요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종합의견

·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렇지 않다
·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input type="checkbox"/> 조례의 공정성 문제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

○ 개정(보완)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제 6 조	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구매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통합관리서버는 제외한다. 1. 평가비율 : 정량평가(90%), 가격평가(10%) 2. 정량 경영평가 : 10% (경영상태, 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 보유상태 및 수행 경험(실적)) 3. 정량 기술평가 : 80% (이하 생략)	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이하 생략)	본 조례 제6조의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충돌되어 이의 해소를 위해 관련 내용 개정

[표 3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교육청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11개)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
경기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3절 조례 통·폐합 방안 검토

1. 개요

- 본 검토는 충청남도 전체 조례('20.8월 말 기준, 749개)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통폐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목적으로 함
- 또한 일반적인 조례 입안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조례 통폐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통·폐합 사례 발굴

1)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산업단지조성·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심의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제실 투자 입지와 소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는, 시범평가 대상 조례로서 검토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와 성격상 유사·중복되므로 조례의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여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소관의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위임법률이 달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통합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3. 산업단지 관련 조례 통합(안) 제시 부분 참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정주여건 개선 조례 흡수)

제1장 총칙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추가)
제2조(정의) ...
제3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
제4조(책무) ...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산업입지심의회
제4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제5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제6장 상생산업단지 위원회 등

2) 기타 통폐합 가능 사례

(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성격과 유사해보이고, 상위 규정의 위임사항도 없어 별도의 조례로 규율해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와 충청남도공업계고등 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 두 조례는 각각 농업계고등학교 및 공업계고등학교의 공동실습소 설치에 관한 명칭 및 위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소관과도 동일하므로 같은 조례 내에서 장 또는 항을 달리하여 구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통합 필요 의견임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연무대기계 공업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충청남도공업계 고등학교 제1기계공동실습소, 천안공업고등학교 부설공동실습소를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 제2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라 한다. (이하 생략)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실습소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한다. (이하 생략)
제3조(소장 및 부소장)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 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이하 생략)	제4조(소장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 이 겸임한다. (이하 생략)
	제3조(업무)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하 생략)
(1안)	
(가칭) 충청남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 2. 위치는 ... ②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 2. 위치는 ... 제3조(업무) ①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②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제4조(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2안)
(가칭) 충청남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공업계 고등학교 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 등
제3장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설치 등
제4장 공동실습소 조직 역할 등

(3) 국·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 1968년 제정, 1970년 시행된 동 조례의 경우 고등학교 선발고사 출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선발고사는 현재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그 이후 동 조례가 관리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산업단지 관련 조례 통합(안) 제시

- (개요) 산업단지조성·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심의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제실 투자입지과 소관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는, 시범평가 대상 조례로서 검토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와 성격상 유사·중복되므로 이를 통합하는 통합(안)을 제시함
 - 한편,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소관의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와 위임법률이 달라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방향,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함. 산업단지 개발조례에서는 목적, 기본방향, 적용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정주 여건조례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목적 규정은 그대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에서의 책무규정을 항으로 구분하여 통합하며, 적용 범위는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는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상위법규에서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면 되므로 별도의 정의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2) 제2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 산업단지개발조례는 상위법규에 따라 사업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조례 내용을 구체화 하면 되나,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는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이므로 도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이에 따라 상생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에서 상생산업단지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제3장 위원회 등

-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입지심의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에서는 상생산업단지 위원회, 상생산업단지 분과위원회, 시·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전체적인 체계는 위원회의 개요, 기능, 구성·운영, 직무, 분과위원회 등, 기타 심의사항, 회의 체계, 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나, 내용이나 특성이 이질적이어서 별도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조문은 개별적으로 구성하였음

(4) 제4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내용은 상위법규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위임을 받아 설치되는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별도 기관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치는 상위 주체인 위원회에 관한 장의 뒷부분에 배치함

(5) 제5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분양가격에 관하여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의 2~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윤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위임받아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관련 내용의 특성상 별도의 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6) 제6장 보칙

- 본래 보칙은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들로 구성되는데, 산업단지개발조례의 경우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보칙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는 자치조레이므로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칙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본 보칙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상생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별하여 구성하였음

[표 35]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개선안 제시>

조문(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각각의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규정은 그대로 통합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p>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 추가 불필요</p>
<p>제3조(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정주여건 개선의 기본방향)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p> <p>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관할지역 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 및 시·군·관계 기관·기업의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방향을 따르고, 제2항의 경우 자치사무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p>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협약하는 산업단지 및 상생산업단지에 적용한다.</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조성되는 상생산업단지를 적용 범위로 함</p>
<p>제2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p>	
<p>제5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② 종합계획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종합계획의 정기적 수정 보완을 위하여 기업·종사자·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이하, 기존 산업단지 정주여건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p>

<p>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연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보고회 개최) 도지사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례보고회를 년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8조(재정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위원회 등</p>	
<p>제9조(위원회) ①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의 기구로서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둔다.</p>	<p>산업단지개발조례상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상의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신규로 신청된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상생 산업단지로서 정주계획의 적합성 심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p>②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p>각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관하여 규정.</p> <p>단, 추가로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 제16조 제2항에서는 신규 신청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정주계획의 적합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추가함 (제1항 제2호)</p>



제11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3명 이상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에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 「경관법」에 따라 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 2년

2.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 :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

3.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 그 직위의 재임기간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내용이 이질적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구성함. 다만, 산업단지개발조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조문으로서 규정해도 무방하므로 통합하여 제시하였음

제12조(상생산업단지 위원회의 구성) ① 상생산업단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의 기획조정실장·저출산보건복지실장·경제실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과 충청남도 교육청 관련 국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련 기업의 임원급 간부

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함

<p>2. 상생산업단지 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 기간에 한한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p> <p>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3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상생산업단지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p> <p>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각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거의 흡사하여 통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함</p>
<p>제14조(상생산업단지 분과위원회) ① 상생산업단지 위원회 업무 중 다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1.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p> <p>2. 거점도시의 정주환경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3. 입지기업의 고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4. 기업의 지역 내 정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p> <p>1.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p> <p>2.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민간인</p> <p>3.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구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상생산업단지 담당부서 사무관으로 한다.</p> <p>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상생산업단지에 관한 별도의 분과위원회이므로 별도 규정함</p>
<p>제15조(시·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지역의 상생 산업단지 조성 및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하여 시·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이하 "시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군 위원회는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과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③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군 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p>상생산업단지에 관한 별도의 시·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므로 별도 규정함</p>

<p>제16조(산업입지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변경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충청남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② 심의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p>③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에서의 "위원회"는 "심의회"로 본다.</p> <p>④ 심의회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p>	<p>산업단지개발조례 상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위원회 이므로 별도 규정함</p>
<p>제17조(정주계획 수립 · 심의)</p> <p>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와 이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②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산업단지정주여건조례의 정주계획 수립 · 심의에 관한 사항이나, 기존에 제2항에 삽입되어 있던 신규 신청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정주계획의 적합성 심의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의 기능 부분으로 이동하였음</p>
<p>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을 거쳐 해당 산업단지 지역을 현지 확인 할 수 있다.</p>	<p>개별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없고,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였음</p>
<p>제1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 · 회피 · 위촉 해제)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p> <p>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위와 같음</p>
<p>제2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투자입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p>	<p>위와 같음. 두 조례 모두 투자입지과 소관 사항이고, 업무 역시 산업단지 관련 업무이므로 별도 규율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p>

<p>제21조(회의록 공개 등)</p> <p>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그 공개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개별적으로 규율할 실익이 없고, 유사한 내용이므로 통합하였음</p>
<p>제22조(위원회 운용 및 심의 규정)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운용 및 심의 규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위와 같음</p>
<p>제4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p>	
<p>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지원센터의 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p>	<p>산업단지개발조례의 내용을 차용</p>
<p>제2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방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 접수 및 「특례법」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위와 같음</p>
<p>제5장 분양가격 결정 및 재생사업 지원 등</p>	
<p>제26조(분양가격 결정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한 이윤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은 100분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p>	<p>이하, 기존 산업단지개발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p>

<p>제27조(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 이윤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p>	
<p>제28조(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법률 제39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법률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25조(자문 등) ① 도지사는 특례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계 전문가의 자문요청은 서면으로 한다.</p> <p>③ 요청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위와 같음. 단 산업단지 개발조례에서는 이하 조에 자문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이하의 보칙 부분으로 이동·통합하였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제29조(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부서간의 협의)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투자입지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생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p>	<p>상생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사항</p>
<p>제30조(조사·연구의 의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공통 적용 사항</p>
<p>제31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공통 적용 사항</p>
<p>제3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자문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공통 적용 사항</p>
<p>제3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공통 적용 사항</p>
<p>제34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하반기 시·군의 상생산업단지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과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p>	<p>상생산업단지에만 적용되는 사항</p>
<p>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공통 적용 사항. 단, 현재 산업단지개발조례는 시행 규칙 없음</p>

4. 조례입안모델(안) 제시

- 본 절에서는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 통·폐합이 필요할 경우 조례 입안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안)을 제시
- 본문에는 기본적인 개념 및 유의사항만 기재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2) 참고

1) 총칙규정

- 총칙규정(總則規定)은 그 자치법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치법규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이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정리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목적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 효율적인 운영 … XX의 발전과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목적으로 일반 주민이 입법 목적,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 지침이 되므로 입법 취지와 목적이 포괄적으로 잘 나타나도록 종합적으로 표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 약칭은 사용하지 않음 (필요가 있는 경우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	“제2조(기본이념) XX도의 ○○는 XX도민의 … 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정 이념을 표현한 것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을 선언적으로 규정	-장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목적과 별도로 기본이념을 규정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 기본이념 규정이 없으나, 상위법령과 관계 없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정의 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2. “@@@@@”란…”	해당 자치법규에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	-상위법령에서 용어정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어를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함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동떨어진 용어정의는 하지 않으며 가능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맞게 정의해야함
해석 규정	“제○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석의 지침을 정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 해소를 위한 규정	-상위법령에 해석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에서 해석하게 되면 원래의 의미를 축소·확대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때에는 규정을 두지 않음
책무· 책임 등에 관한 규정	“제X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 건강한 삶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여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규정	-도지사 등의 책무외에 사업자, 주민에게 의무 부과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위임이 없는 경우 두지 않음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 부과가 아닌 “…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제X조(적용 범위) 이 조 례는 @@도에 설치된 %%에 적용한다.”	해당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 나 사항을 규정	-규정에 제목은 여러 표현을 쓰고 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적용 범위)”로 쓰는 것을 권장함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X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OO도의 && 등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규칙 상호 간 또는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 유지를 위한 규정	-다른 자치법규와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 법규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 의 소지가 있어 주의 필요

2) 본칙규정

- 해당 조례의 중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으로서 조례의 목적에 따라 구성이 매우
상이하나 대체로 기본계획(시행계획), 관련 객체(대상), 관련 주체(기관, 위원회 등),
절차, 기타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을 선별
하여 정리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보조금 관련	“제X조(OO 설치 비용 지원) @@도에서는 … 을 위하여 OO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 -“예산의 범위에서 …” 라는 표현은 방만한 보조금 지출을 방지하고 합리적·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것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할 때에는 그 상대방과 대상 사업(또는 행위)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재정· 회계 제도 관련	“제O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도 OO특별회 계(이하 “회계”라 한다) 는 △△도지사가 운용· 관리한다.”	해당 자치법규 운영을 위한 재정·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목적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 외에 특별회계 설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 관련	제X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② …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규정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아니면 조례가 필요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됨 -또한,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해야 함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사용료·수수료 관련	제X조(사용료) 000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 이용 등에 부담되는 경비 등을 규정	-사용료와 수수료는 금전납부의무 부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개별 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 또는 부과·징수하고 이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위원회 관련	제X조(00위원회의 소관 사무) 00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 방법에 따른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규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

3) 부칙규정

- 부칙은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일과 본칙의 시행에 따른 과도적 조치인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 기존 조례·규칙의 폐지, 그리고 본칙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개정된 본칙과 다른 조례·규칙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부분으로 이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을 선별하여 정리

구분	예시	유의사항
시행일 관련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로 자치법규를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인 공포일과는 구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조례 2. …조례”	-자치법규를 새로 재정하거나 발전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치법규에 관련 자치법규의 폐지를 규정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X조(…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이 시행 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은 …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 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치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제4장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 제1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 제2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방안
- 제3절 입법평가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제언



제1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1. 조례의 주요 내용

1) 목적

- 충청남도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제정

2) 입법평가의 대상

- 입법평가 대상으로 제정조례 또는 전부개정 조례 중 시행 후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함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3) 입법평가의 주체

-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
-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원으로 도의회의원, 변호사·교수·연구원·입법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기타특징

- 입법평가 심의·조정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으로 교수, 입법전문가,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등 사회 각계각층 외부전문가가 구성원으로 활동
-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음



- 입법평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평가대상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개선방안

1) 입법평가 대상 확대

-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입법평가 제외 대상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법령위임조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의 삭제 검토가 필요함. 법령위임조례의 사후 입법평가 대상 포함
- 법령위임조례를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법률위임조례가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한다면 자치조례에 법률 위임사항이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i)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를 구별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고, ii)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iii) 조례상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의 법률위임이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둘째, 법령위임조례를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고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조례의 현행화는 결국 조례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결국 조례의 현행화에 일부 흠결 또는 하자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법령위임조례 역시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입법평가위원회 개선점

(1) 위원 확대

-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에서 더 좋은 입법 만들기라는 입법평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위원회 구성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표 36] 타지자체 입법평가 위원 구성 비교

구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위원 수	13명 이내	2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2) 성비 개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개선 확보와 양성의 골고른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소외 없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항목으로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 추가가 필요함

(3) 임기 변경

- 조례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도의원 임기가 만료 등의 문제와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2년으로 변경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는 개정 검토가 필요함

(4) 해촉

-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선정 등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문 신설 검토가 필요함

(5) 보궐

- 위원 활동의 중단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이 어려워 결원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궐규정과 보궐위원의 임기(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등에 대한 조문 신설 검토가 필요함

(6) 존속기간

- 조례 제5조 제8항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례 입법평가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문은 삭제해야함

[표 37] 충남 사후 입법평가 조례 개선방안 총괄표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3 조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 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 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라 하더라도 상위법령 개정 등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입법평가의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제 5 조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입법평가의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의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확대 필요 ※ 타지자체 구성보다 낮음
제 5 조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

구분	현행	개정 (보완)	개정 사유
제 5 조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의원 임기 만료 등의 문제와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임기의 변경 필요
제 5 조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 설〉 ⑥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규정 신설 필요
제 5 조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신 설〉 ⑦ 위원이 활동의 중단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이 어려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제4항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 기간은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 부재시 총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정 신설 필요
제 5 조 제 8 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삭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해야 하므로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의 삭제가 필요



제2절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방안

1. 현행 입법평가기준 주요내용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 제1항은 6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별표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세부 평가기준은 ①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②조례의 실효성, ③조례의 공정성, ④주민의견의 수용성, ⑤조례 내용의 적정성, ⑥충청남도현실 부합성, ⑦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⑧종합의견 등의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됨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은 세부항목으로,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실효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이 되고 있는가,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의 공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등으로 분석

- 주민 수용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등으로 분석
- 조례 내용의 적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등으로 분석
- 충청남도현실 부합성은 세부항목으로,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를 분석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세부항목으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등으로 분석
- 종합의견은 세부항목으로,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등으로 분석

[표 38] <충남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input type="checkbox"/> 위임조례 <input type="checkbox"/>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 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 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자료 첨부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input type="checkbox"/> 법정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조례로 정한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성별 구성 관련 자료 첨부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에 불부합 <input type="checkbox"/> 위임근거 불명확 <input type="checkbox"/>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input type="checkbox"/>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2. 개선방안

1) 총괄 검토

- 정책평가의 경우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목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가를 중심으로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나 입법평가의 경우 정책보다 자치규범인 조례의 법령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에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명령·규칙 및 처분심사의 경우 명령·규칙 및 처분이 기속인 경우는 헌법과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재량인 경우는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이나 속성상 각각의 사무에 따른 평가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서 단순히 위임조례로서의 기능을 하여 입법평가가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독자적인 자치사무나 법령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는 달리 규율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사무 중에서 “판단여지(요건)”나 “재량(효과)”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이 필요함

2) 사후 입법평가 세부항목 세분화 필요

○ **(필요성)**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입법영향분석항목으로서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세부항목이 5개, 2. 조례의 실효성 세부항목이 5개, 3. 조례의 공정성 세부항목이 2개, 4. 주민수용성 세부항목이 4개,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세부항목이 6개,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세부항목이 1개,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세부항목이 6개, 8. 종합의견 세부항목이 4개로 구성되어있음

- 이 중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와 관련이 있는 항목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인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은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또는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이 있는가?’ 항목임
- 문제는 이 세부항목에 의하더라도 예컨대 헌법 규정 또는 기본권에 반하는 규정이 있는지, 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불리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판단하기가 어려움

○ **(제안)** 따라서 사후 입법평가 세부항목을 조례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문제점으로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들을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추가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법제처(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유형별 문제점을 ① 헌법 규정, 헌법상 기본원칙이나 기본권에 반하는 경우, ② 상위법령이나 국제조약협정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보다 불리하게 정한 경우, ③ 법률상 규제(국민의 권리·의무 부여) 등을 조례로 신설 하는 경우, ④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 ⑤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에 맞지 않는 경우, ⑥ 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 따른 조례·규칙 소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법령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그 고유권한(인사권, 재정권, 집행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⑨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⑩ 법령상 부여된 단체장의 인허가 등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⑪ 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문제된 주요사항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 문제점, 정비지원체계와 그 개선방안 연구 -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정비지원 등 방안 -』, 법제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12.

-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추가 항목)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에 추가할 항목으로서 i) ‘헌법 규정이나 기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는가?’, ii)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조례 내용의 적정성 추가 항목) 조례 내용의 적정성에 추가할 항목으로서 i) ‘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 따른 조례·규칙 소관사항이 적정한가?’, ii)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를 제안함

[표 39] 충남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 개선방안 총괄표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개정사유
	현행	개정(보완)	
1.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헌법 규정이나 기본권에 반하는 조항이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있는지 검토 필요
	7) <신 설>	7)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보다 불리하게 정한 조항이 있는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게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불리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5.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 설>	7) 자치단체의 사무 종류에 따른 조례·규칙 소관 사항이 적정한가?	위임 사항을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8) <신 설>	8)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3. 정책효과 분석평가 모델(안) 제시

1) 개요

- 입법평가 분석항목 중 조례 실효성 확인의 세부항목으로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음. 이를 해당 조례의 정책(단위)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아래와 같은 정책효과 분석 평가 모델(안)을 제시하고자함
- 다만 이 모델(안)은 조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활용). 정책평가 결과 집행률이나 달성율 등이 높다, 낮다 라는 결론이 조례 효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음. 즉 정책평가 이외에 조례의 자치법규적 가치와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별개로 이루어 져야함
- 또한 조례에 기반한 중요 정책사업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사업의 특성이 고려한 별도의 개별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따라서 이하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모든 조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평가모델 발굴 방법

- (원칙) 조례는 각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업의 법규적 근거를 제시해주는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해야 함. 사후 입법평가가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조례의 적법성, 실질적 실효성, 규제 준수도, 운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정책효과 분석평가는 그 조례가 실제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지자체 사업의 실현가능성·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사후 입법평가는 법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책효과 분석평가는 정책, 즉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평가 모델 발굴 방법)** 본래 평가 모델은 모델 발굴 대상이 되는 배경 환경의 현황을 고려하여 SWOT 분석 등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비전, 그에 따른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을 통해 추진을 체계화한 후,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조사 자료 등 수집·분석 →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체에 대한 인식 조사·의견 수렴 실시 → 평가지표 유형화 및 양식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내실화 →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지표 개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함
- 다만, 본 보고에서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추후에 본격적인 정책평가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어떠한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 관련하여 ‘곽종무, 『시정 주요 시책사업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내용을 참고하였음

3) 평가지표

(1) 평가지표의 구분

- 앞의 원칙에 따라 정책효과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수립한 사업계획과, 그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을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함. 이러한 성과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로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와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지표로 구분해볼 수 있음

(2) 정량적 평가지표

■ 개요

- 정량적 평가지표로서 연도별 예산 집행을 및 지자체 스스로가 설정한 성과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목표 달성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고려사항

가. 예산 집행률

- 사업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정량적 평가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음.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음. 다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얻게 될 패널티를 회피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반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예산이 올바른 곳에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자체 평가·검토 여부) 판단해야 할 것임

나. 자체 평가·검토 여부

- 사업 수행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검토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에 따라 자체적인 평가·검토를 수행하였는지, 평가·검토 내용이 적절한지, 개선사항이나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함

다. 성과목표 달성률

- 대체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업무에 따른 정량적 성과목표를 두게 되는데, 해당 성과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성과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음. 단, 성과목표가 얼마나 실현가능한 정도로 제시되었는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질적 평가로 정성적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라. 사업성과·실적의 관리 여부

- 사업 실시 후 성과나 실적을 보고서 등을 통해 제시·관리하였는지, 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사업성과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3) 정성적 평가지표

■ 개요

- 정성적 평가지표는 관련 내용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종합적 실현가능성 진단, 목표 설정의 적절성 진단, 목표성과 측정지표의 적정성 진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고려사항

가. 종합적 실현가능성

- 수립된 사업계획이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과도하게 거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지 (ex. 국가 차원의 정책수행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부서에 관련된 업무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나. 목표설정의 적절성

-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사업의 전체적인 비전에 맞게 목표설정을 했는지, 도정 전반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판단함

다. 목표성과 측정지표의 적정성

- 설정된 목표를 고려하여 성과 측정지표로 제시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임. 설정된 목표와 측정지표가 부합하는지, 측정지표로서 제시된 건수 등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는지, 측정지표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표로 제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판단함



(4) 평가모델안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 관련 별표의 사후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획수립 여부,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 및 관련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내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예·결산 내역을 확인토록 하고 있음
- 특히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 및 사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12개 세부항목 (가~타)을 내부자료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는바 이 중 '바' 항목에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
- 앞의 기존 평가항목과 관련된 지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정책평가적 요소를 고려한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 정책효과 분석평가 모델을 평가 세부항목 내부자료에 접목해 구현함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제 출 자 료
2.조례의 실효성	(2-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 및 관련 사업의 이행여부	가. 센터 등 설치	
		나. 실태조사	
		다. 교육 홍보	
		라. 인증기관 등 지정	
		마. 시설 등 대여	
		바.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 정책효과 분석평가 적용
		사. 기관교류	
		아. 구매 실적 등	
		자. 포상	
		차. 허가승인	
		카. 위탁	
		타. 기타	

[표 40] 〈조례 정책효과 분석평가표(안)〉

평 가 일	년 월 일	부 서				
사 업 명		담 당				
관련 조례명						
예 산 증 감						
사업 실시 누적 연도						
최근 5년간 예산액(천원)		'16	'17	'18	'19	'20
평균 예산 증감률(CAGR)						
정 량 평 가						
평	가	항	목	배점	특점	
1. 집행 관 련 평가지표	1-1. 예산 집행률			10		
	1-2. 자체 평가·검토 여부			10		
2. 성과 관 련 평가지표	2-1. 성과목표 달성률			10		
	2-2. 사업 성과·실적의 관리 여부			10		
정 성 평 가						
평	가	항	목	시행부서 의견	평가자 의견	
3. 계획 관 련 평가지표	3-1. 종합적 실현가능성					
	3-2. 목표 설정의 적절성					
	3-3. 목표성과 측정지표의 적정성					
평가 결과 시책사업 개선 사항						

※ 이 모델은 정책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시범적으로 구현한 것임



[표 41] 기획경제위원회 :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적용 예

평 가 일	년 월 일		부 서					
사 업 명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관련 제반 사업			담 당				
관련 조례명	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예 산 증 감								
사업 실시 누적 연도				'97~(조례 제정년도)				
최근 5년간 예산액(천원)				'16	'17	'18	'19	'20
				-	86.6	86.6	98	128
평균 예산 증감률(CAGR)				10.26%				
정 량 평 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집행 관련 평가지표	1-1. 예산 집행률			10		10		
	1-2. 자체 평가·검토 여부			10		8		
2. 성과 관련 평가지표	2-1. 성과목표 달성률			10		10		
	2-2. 사업 성과·실적의 관리 여부			10		7		
정 성 평 가								
평 가 항 목				시행부서 의견		평가자 의견		
3. 계획 관련 평가지표	3-1. 종합적 실현가능성							
	3-2. 목표 설정의 적절성							
	3-3. 목표성과 측정지표의 적정성							
평가 결과 시책사업 개선 사항								
정책 시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고, 해당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성과를 대체로 잘 이행하였으며, 예산 집행률 및 성과목표 달성률이 높고, 자체 평가·검토 및 사업 성과·실적도 잘 관리하고 있음								

[표 42] 행정문화위원회 :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예

평 가 일	년 월 일		부 서				
사 업 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담 당				
관련 조례명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산 증 감							
사업 실시 누적 연도							
최근 5년간 예산액(천원)			'16	'17	'18	'19	'20
			-	2,800	3,068	682	2,087
평균 예산 증감률(CAGR)			-7.08%				
정 량 평 가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1. 집행 관련 평가지표	1-1. 예산 집행률		10		9		
	1-2. 자체 평가·검토 여부		10		8		
2. 성과 관련 평가지표	2-1. 성과목표 달성률		10		5		
	2-2. 사업 성과·실적의 관리 여부		10		8		
정 성 평 가							
평 가 항 목			시행부서 의견		평가자 의견		
3. 계획 관련 평가지표	3-1. 종합적 실현가능성						
	3-2. 목표 설정의 적정성						
	3-3. 목표성과 측정지표의 적정성						
평가 결과 시책사업 개선 사항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예산이 0.49% 가량 미집행됨. 성과목표 제시와 달성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자체 평가·검토 및 사업 성과·실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다만,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제3절 입법평가 전담조직 및 인력 등 제언

1. 입법평가 전담조직의 필요성

- 사후입법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사후입법평가는 자치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치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대두
 - 정책 실현 도구로서의 조례의 효과성
- 법령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필요
 -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여야 하므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함
 - 자치조례의 효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환류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함
 -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는 법학, 경제학, 정책학 등 융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
- 사후입법평가는 고유한 전문성과 숙련을 요구함
 - 사후입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분석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행정·문화·복지·환경·농업·수산업·해양·안전·건설·소방·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함
 - 입법정책담당관의 기존 업무(입법지원 및 정책지원)에 사후입법평가를 부가하는 방식으로서는 사후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2. 타 시도사례 비교

- 현재 사후입법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이 별도로 구성된 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도의회 중심으로 사후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우, 법제지원팀(입법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
 - 경기도의회의 역시 입법운영팀(입법정책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사후입법평가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담당조직

- 법제지원팀(입법담당관실)에서 사후입법평가지원을 수행
- 전담인력 3명 : 일반임기제 5급 1명(팀장), 일반임기제 6급 1명, 일반행정직 6급 1명
- (주) 팀장의 경우, 사후입법평가를 전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제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 법제지원팀의 정원은 7명임(현원 6명)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정원은 14명으로서, 담당관(1명), 입법정책팀(6명), 법제지원팀(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음

○ 자체평가 결과 : 법제지원팀은 2017년 ~ 2019년 자체적으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였음

- 2017년 : 3회 40건
- 2018년 : 4회 109건
- 2019년 : 4회 95건
- ➔ 분기별로 약 25건의 조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2) 경기도 사례

○ 담당조직

- 입법운영팀(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사후입법평가지원을 수행
- 전담인력 6명 : 팀장, 일반임기제 6급 3명, 일반행정직 2명
- (주) 팀장의 경우, 사후입법평가를 전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운영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 입법운영팀의 정원은 19명임(현원 19명)
- *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정원은 24명으로서 담당관(1명), 입법정책팀(4명), 입법운영팀(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음

○ 자체평가 결과 : 입법운영팀은 2018년 ~ 2020년(예정) 자체적으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

- 2018년 : 1회 38건
- 2019년 : 2회 83건
- 2020년 : 2회 91건(예정)
- ➔ 반기별로 약 40~45건의 조례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3) 합의 및 제안

○ 전담조직의 규모

- 제주도의 경우 2명, 경기도의 경우 5명의 전담인력이 사후입법평가를 담당하고 있음(팀장을 제외한 수치임)
- 사후입법평가 전담조직을 위해서는 최소 1개 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팀의 인원은 4명이 바람직

3. 입법평가팀의 구성 및 업무분장

1) 제1안

○ 신설될 입법평가팀은 팀장(임기제 5급)을 포함하여 임기제 6급 2명, 행정직 8급 1명, 총 4명으로 구성함

- 팀장(임기제 5급) : 사후입법평가팀을 총괄하며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
- 임기제 6급 2명 :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 후속조치 등),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행정직 8급 1명 : 일반사무업무, 예산집행업무, 타 시도 자치입법 현황 조사

[표 43] 사후입법평가팀 사무분장 1안

직위(급)	분장사무
팀장 임기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입법평가팀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임기제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 후속조치 등)
임기제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행정직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무업무, 예산집행업무 타 시도 자치입법 현황 조사

○ 소요인건비

- 사후입법평가팀 신설로 인한 추가인건비는 약 204,696천원임
- 임기제 5급(상당) 1명 : 61,063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단,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임기제 6급(상당) 2명 : 101,168천원
 - * $50,584\text{천원} \times 2\text{명} = 101,168\text{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단,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증가할 수 있음)
- 행정직 8급(12호봉) 1명 : 42,465천원
 - * $2,621,300\text{원} \times 12\text{월} \times 1\text{명} + 35\% = 42,465,060\text{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 12호봉(월지급액 2,621,300원)을 가정함
 - * 35%는 각종 수당 및 제비용 포함

2) 제2안

- 2안은 신설될 사후입법평가팀을 팀장(임기제 5급)을 포함하여 행정직 6급 1명, 임기제 6급 1명, 행정직 8급 1명, 총 4명으로 구성
 - 팀장(임기제 5급) : 사후입법평가팀을 총괄하며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을 담당
 - 행정직 6급 1명, 임기제 6급 1명 :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 후속조치 등),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행정직 8급 1명 : 일반서무업무, 예산집행업무, 타 시도 자치입법 현황 조사



[표 44] 사후입법평가팀 사무분장 2안

직위(급)	분장사무
팀장 임기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입법평가팀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행정직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농수산해양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임기제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추진(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법평가 후속조치 등)
행정직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사무업무, 예산집행업무 타 시도 자치입법 현황 조사

○ 소요인건비

- 사후입법평가팀 신설로 인한 추가인건비는 약 211,927천원임
- 임기제 5급(상당) 1명 : 61,063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단,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증가할 수 있음)
- 행정직 6급(16호봉) 1명 : 57,815천원
 - * $3,568,800원 \times 12월 \times 1명 + 35\% = 57,814,560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 16호봉(월지급액 3,568,800원)을 가정함
 - * 35%는 각종 수당 및 제비용 포함
- 임기제 6급(상당) 1명 : 50,584천원
 - * $50,584천원 \times 1명 = 50,584천원$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을 기준으로 함(단, 임용 예정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증가할 수 있음)
- 행정직 8급(12호봉) 1명 : 42,465천원
 - * $2,621,300원 \times 12월 \times 1명 + 35\% = 42,465,060원$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 12호봉(월지급액 2,621,300원)을 가정함
 - * 35%는 각종 수당 및 제비용 포함

3) 제1안과 제2안의 비교

- 1안과 2안의 차이는 6급 1명을 임기제로 하는가 또는 행정직으로 하는가의 문제임
- 1안은 7개의 위원회를 2명의 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임
 - 이 경우,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모든 위원회의 사후입법평가를 담당하게 되므로, 질 높은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제한된 임기지만, 순환보직에 의한 잦은 업무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팀장을 포함하여 6급(상당) 2명 모두 임기제공무원인 관계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형성이 어려울 가능성 있음
- 2안은 1명의 행정직공무원(6급)이 사후입법평가를 담당하게 하는 것임
 - 사후입법평가 실무에 있어서, 실제 조례와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행정직 6급을 배치함으로써 집행부와의 협력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음
 - 순환보직에 의한 행정직공무원의 배치는 업무의 단절,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 있음

[표 45] 제1안과 제2안의 비교

비교	제1안	제2안
인원 및 직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제 5급 : 팀장 임기제 6급 : 2명 행정직 8급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제 5급 : 팀장 행정직 6급 : 1명 임기제 6급 : 1명 행정직 8급 : 1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에 2명의 임기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중 1명을 행정직으로 임용
소요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204,69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211,927천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사후입법평가를 수행 업무의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수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부족 업무의 단절 발생



〈붙임 자료1〉 충남 자치조례 분류

[표 46] 충청남도 조례 현황 (2020. 8월말 기준)

상임위	합계		소관실국	합계	소관부서			
전체 조례 749 (본청 619)								
운영	24		의회사무처	24				
기획 경제	111		공보관	3				
		기획조정실	51	정책기획관	12	예산담당관	17	
				균형발전담당관	5	교육법무담당관	13	
				정보화담당관	4			
		경제실	36	경제정책과	4	일자리노동정책과	11	
				소상공기업과	15	투자입지와	4	
				국제통상과	2			
		미래산업국	20	미래성장과	6	산업육성과	4	
				에너지과	7	내포신도시발전과	3	
			도립대	1				
행정 문화	135	자치행정국	65	자치행정과	27	운영지원과	19	
				인사과	9	세정과	10	
		공동체지원국	18	공동체정책과	12	사회적경제과	4	
				청년정책과	2			
		문화체육관광국	41	문화정책과	25	문화유산과	6	
				체육진흥과	3	관광진흥과	7	
			공무원교육원	1				
			감사위원회	9				
	충남도서관	1						
복지 환경	156		여성가족정책관	22				
		저출산보건복지실	91	출산보육정책과	12	노인복지과	19	
				사회복지과	16	장애인복지과	17	
				보건정책과	14	건강증진식품과	13	
		기후환경국	42	기후환경정책과	18	미세먼지대책과	8	
				환경안전관리과	8	물관리정책과	5	
				환경보전과	3			
			보건환경연구원	1				

상임위	합계	소관실국	합계	소관부서			
농수 해양	92	농림축산국	54	농업정책과	10	농식품유통과	8
				식량원예과	14	농촌활력과	8
				산림자원과	7	축산과	5
				동물위생방역과	2		
		해양수산물국	20	해양정책과	5	해운항만과	6
				수산자원과	5	어촌산업과	2
				(수산유통사업단)	2		
		농업기술원	9				
		산림자원연구소	6				
수산자원연구소	3						
안전 소방	101	재난안전실	25	안전정책과	9	사회재난과	4
				자연재난과	11	하천과	1
		건설교통국	58	건설정책과	10	건축도시과	20
				교통정책과	16	도로철도항공과	8
				토지관리과	4		
		소방본부	16	소방행정	4	화재대책	11
				(119광역기동단)	1		
		종합건설사업소	2				
		(교육청 130)					
교육	130	기획국	40	정책기획과	10	교육혁신과	15
				예산과	9	학교지원과	6
		교육국	56	교육과정과	10	교원인사과	4
				민주시민교육과	19	미래인재과	8
				체육건강과	15		
		행정국	30	총무과	9	행정과	3
				재무과	13	시설과	1
				안전총괄과	4		
		감사관	4				

[표 47] 21년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자치조례 목록
(20.8월 말 기준, 2018.1.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	충청남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위원회	의회사무처
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의회사무처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4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5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6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의회사무처
7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의회사무처
8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의회사무처
9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 위원회	공보관
10	충청남도프로젝트탐설치운영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1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2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4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5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
17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18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19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실 경제정책과
20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21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22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23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24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5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6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경제실 국제통상과
27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28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행정문화 위원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29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0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2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4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5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6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37	충청남도 도민현장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38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39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0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1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2	충청남도 포상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3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4	충청남도 공인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5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6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47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48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49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50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1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3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4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55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56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57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58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59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0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2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3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64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65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66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67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조사과
68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환경 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69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70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71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72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73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74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75	충청남도 임신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76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77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78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79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80	충청남도 의료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81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82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83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84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85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86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87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88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89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90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91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92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93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9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95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96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농수산해양 위 원 회	농정국 농업정책과
97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98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99	충청남도 농어촌특산물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100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101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102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103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104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105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농정국 친환경농산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06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107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108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109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해양수산물국 해양정책과
110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해양수산물국 해운항만과
111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11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장수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113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114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지원과
115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산림환경연구소
116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장수에 관한 조례		수산자원연구소
117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118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119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20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2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22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2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2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125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126	충청남도 중 ·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교육위원회	기획국 교육혁신과
127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		기획국 교육혁신과
128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국 학교지원과
12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국 학교지원과
130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기획국 예산과
131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육국 교원인사와
132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교육국 교원인사와
133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육국 교원인사와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34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35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3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37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3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39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40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141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교육국 미래인재과
142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교육국 미래인재과
143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교육국 미래인재과
144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교육국 미래인재과
145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교육국 미래인재과
14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47	충청남도교육청 방수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48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4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50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5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152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행정국 총무과
153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행정국 총무과
15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행정국 총무과
155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행정국 총무과
15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국 행정과
157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재무과
15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행정국 재무과
159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총괄과
16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행정국 안전총괄과
161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행정국 안전총괄과
162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감사관

[표 48] 21년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법령위임조례 목록

(20.8월 말 기준, 2018.1.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2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3	충청남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4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5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6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7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8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9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0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1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1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13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14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15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16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제실 경제정책과
17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18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1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0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1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23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경제실 투자입지과
24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제실 투자입지과
25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경제실 투자입지과
26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27	충청남도개업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28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29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국 산업육성과
30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3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32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33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미래산업국 내포신도시발전과
34	충청남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5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6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7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38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9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0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1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42	충청남도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상 공소범위 등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3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4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5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6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47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48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49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50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51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국 인사과
52	충청남도 도세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5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5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55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자치행정국 세정과
56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7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8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59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0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1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2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3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4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5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6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67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68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69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70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71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72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
73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감사과
74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감사과
75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감사위원회 조사과
76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조사과
77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위원회 조사과
78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감사위원회 조사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79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복지환경 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80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81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8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8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84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정책관
85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86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87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88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출산보육정책과
89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0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1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2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3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4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95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지정책과
96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복지정책과
97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98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99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100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101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2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3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4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5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6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7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8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109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110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11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112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113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114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115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116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117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18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1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0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1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2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3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4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125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26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27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28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29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30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13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2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3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4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5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6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137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38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139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140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141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142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
143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농림축산국 친환경농산과
144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145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146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농림축산국 축산과
147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축산과
148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149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150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해양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51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친환경농업과
152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153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화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154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산림자원연구소
155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안전건설소생위원회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156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157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58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59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60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61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62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163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재난안전실 하천과
164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65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66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67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68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69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70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71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2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3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4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5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6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7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8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79	충청남도 건축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80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81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182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3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4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5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6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7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8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189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190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191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19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193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194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195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196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19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198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199	충청남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00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01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2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3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4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5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6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207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종합건설사업소
208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교육위원회	기획국 정책기획과
209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0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1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2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기획국 정책기획과
215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기획국 교육혁신과
216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준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기획국 교육혁신과
217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국 교육혁신과
218	국 · 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기획국 교육혁신과
219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교육국 교육과정과
220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교육국 교육과정과
221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교육국 교육과정과
22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223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기획국 예산과

	조례명	상임위	소관 실국 및 부서
224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기획국 예산과
225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국 예산과
226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기획국 예산과
227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기획국 예산과
228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자녀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기획국 학교지원과
229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획국 학교지원과
230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기획국 학교지원과
231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232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233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육국 체육건강과
23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총무과
235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행정국 총무과
236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행정국 총무과
237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행정국 행정과
238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행정국 행정과
239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0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1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3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4	충청남도교육청 작곡·편곡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6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행정국 재무과
247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관
248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감사관

〈붙임 자료2〉 조례입안모델(안)

[표 49] 조례입안모델(안) 세부사항

총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목적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000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XXXX의 발전과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 그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자치법규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 기능. 통상 제1조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규정은 제1조에 두고, 목적규정의 제목은 간명하게 “(목적)”으로 표현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 자침이 되므로 입법취지와 목적이 포괄적으로 잘 나타나도록 종합적으로 표현 -목적규정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며, 둘 이상의 조문, 또는 항·호 또는 목으로 나누어 표현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음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	“제2조(기본이념) XXX도의 0000는 XXX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조례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조례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법이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에서는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적규정과 별도로 기본이념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조례의 경우 목적규정에서 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례의 경우에는 기본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나, 조례 중 상위 법령과 관계없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기본이념규정의 표현 방식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으나, 기본이념 규정을 두는 이유는 목적규정에서 나타내지 못한 제도의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특히 강조하려는 것이므로 기본이념규정의 내용이 목적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총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정의 규정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OOOO”란 XX를 위해 \$\$\$\$가 행하는 일련의 활동 중 @@@@를 육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란… 2. “@@@@”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	<p>-한법이나 「민법」·「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를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함</p> <p>-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와 다른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그와 같은 정의규정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규정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적 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p> <p>-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는 동떨어진 용어정의를 자치법규의 의미를 알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용법에 맞게 용어정의를 해야 함</p> <p>-모든 자치법규에 정의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정의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음</p>
해석 규정	<p>“제○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주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 목적규정이나 기본이념규정 또는 정의규정도 자치법규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나, 해석규정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나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둠	<p>-해석규정이 그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해석지침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로 총칙규정에 두고, 총칙규정에 해석규정을 두는 경우 보통 목적규정·기본이념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에 둠</p> <p>-제목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이 없으며, 보통 “(해석·적용상의 주의)”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나 해석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내용에 알맞은 제목을 붙임</p> <p>-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해석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상위법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해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이러한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 원래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총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책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	“제X조(도지사의 책무) OO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도지사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하여 둠	<p>-시장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치법규의 총칙에 둠</p> <p>-일반적으로 목적규정·기본이념규정 및 정의규정 다음에 두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둠</p> <p>-도지사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정형화된 것이 없고, 그 자치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의 의무)”, “(시회의 책임)”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규정의 제목으로는 “(시책의 수립·시행)”, “(기본시책의 수립)” 등의 표현을 사용함</p> <p>-도지사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여하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후5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p> <p>-법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사업자의 의무나 국민의 의무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하나, 자치법규의 경우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두지 않아야 함(다만,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아니라 “...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p>

총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제X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설치된 %%%에 적용한다.” “제X조(적용 범위) %%를 목적으로 임시 로 설치하는 #####의 경 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해당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사항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으로서, 그 자치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대상범위를 명시하거나, 자치법규 중 일부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p>-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전부 또는 여러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총칙부분에 두지만, 특정 조항이나 일부 조항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조항 바로 다음에 둠</p> <p>-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총칙부분 중 목적 규정·기본이념규정·정의규정 등의 다음에 두되,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규정보다는 앞에 둠</p> <p>-규정의 제목은 “(적용 범위)”로 표현함. 입법례를 보면 “(적용범위)”, “(적용배제)”, “(적용제외)”, “(적용의 제외)”, “(적용의 특례)”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적용 범위)”로 쓰는 것을 권장함</p>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제X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OOO도의 &&& 등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규칙 상호 간 또는 각 조례 또는 규칙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자치법규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또는 규칙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p>-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부분과 부칙부분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총칙부분에서는 그 조례 또는 규칙과 다른 조례 또는 규칙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부칙부분에서는 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함</p> <p>-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에서 규율 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두는 것인 반면,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 조례 또는 규칙과 다른 조례 또는 규칙 간의 관계에서 어느 조례 또는 규칙이 먼저 적용되는 지 등에 관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함</p> <p>-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 또는 규칙 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p> <p>-규정의 위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 조례의 총칙부분에 두되,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둠</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지자체 장의 임용권 관련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 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에 대해서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다른 자가 임용권을 가지게 하거나, 누구를 임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음
보조금 관련	“제 X 조 (○○○○ 설치 비용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데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함	-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 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와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의무부와 형식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 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예산의 범위에서 …”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방만한 보조금지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은 예산에 반영 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 적임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p>-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할 때에는 그 상대방과 대상 사업(또는 행위)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임</p> <p>-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함. 다만, 보조금의 상대방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로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p>
공유 재산 관련		<p>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함</p>	<p>-공유재산과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하기, 공공시설의 이용, 행정재산의 관리유탁, 행정재산의 처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기부채납 등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p> <p>-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규율하려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검토하여 해당재산의 관리사무가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p> <p>-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정할 때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개별 법령상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익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령상의 수익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익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율할 수는 없음</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재정·회계 제도 관련	<p>“제○조(목적) 이 조례는 ○○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도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p>	<p>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 통치권을 토대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과 그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를 경리하는 작용’을 말함</p> <p>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도록 하는 단일 예산의 원칙은 수입과 지출 간에 특별한 견련(牽聯)관계를 단절하고, 모든 수입을 일괄하여 여기에서 일체의 경비를 지출하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 단일의 원칙은 재정의 통일을 기하고 의회의 재정감독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다양성과 재정규모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단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임</p>	<p>-「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p> <p>-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들은 그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의 내용만 다를 뿐 그 입법 형식과 체계 및 입법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음</p> <p>-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는 특별회계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경우와 행정작용을 규정하는 조례 가운데 그 행정작용을 뒷받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 특별회계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특별회계의 목적·설치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주체, 계정의 구분, 세입·세출 규정)일반적인 사항,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준비금의 설치), 결산 관련 규정(예산의 이월 등, 잉여금), 사무 위탁과 감독, 존속기한 등의 체제와 순서로 되는 것이 일반적임</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기금 관련	<p>제X조 (기금의 조성 및 출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〇〇〇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출연금.</p> <p>2. 기금의 운용수익금</p> <p>3. 그 밖의 수입금</p> <p>② 〇〇〇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p>	<p>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그 밖의 특정 정책 사업 등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임</p>	<p>-개별 기금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총칙 규정(기금의 목적·정의와 기금 설치 규정), 기금의 재원과 용도(재원, 외부차입, 용도, 목적 외 사용금지), 기금의 관리와 운용(기금관리 주체, 운용계획,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금운용, 기금사무의 위탁), 회계 및 결산(회계연도, 회계처리방식, 회계기관, 결산결과의 처리, 결산보고)의 체제와 순서로 되는 것이 일반적임</p> <p>-「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서는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아니라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게 되며, 이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됨</p> <p>-또한, 기금 설치 규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도 함께 규정함. 설치목적은 규정할 때에는 “...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에 충당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p> <p>-기금의 설치에는 정관 작성이나 등기, 등록 등의 설립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바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기금설치주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사용료·수수료 관련	<p>제 X 조 (사 용 료) 000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조(사용료) 제○조에 따른 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p>‘수수료’란 주민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함. 이 중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를 좁은 의미의 ‘수수료’라 하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함.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됨</p>	<p>-사용료와 수수료는 주민에게 금전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p> <p>-공공시설의 이용에는 주민이 공공시설로부터 받는 서비스도 포함되므로 사용료에는 공단 입장료, 공공묘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물론 공립학교 수업료, 공공병원 진료비, 지하철도의 운임, 수도 요금도 모두 사용료의 범주에 포함됨</p> <p>-「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p> <p>-「지방자치법」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신설하려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개별 법령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함</p> <p>-특히 개별 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대상자를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자만을 부과대상자로 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 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일반적인 조항만으로는 부과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고 그 기준이나 절차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p> <p>-「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때에는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규칙이나 훈령으로</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p>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음</p> <p>-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〇〇시 수수료 징수 조례'와 같은 일반 조례를 제정하여 수수료의 징수근거, 금액, 그 밖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납부방법, 징수시기, 감면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p> <p>-개별 조례에서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 조문의 제목은 '이용료',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수수료', '등록 수수료', '수수료의 징수'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또는 '수수료'로 통일하는 것이 적정함</p> <p>-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거나 사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많으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제공받는 주민 등을 주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함</p>
위원회 관련	<p>제X조(〇〇위원회의 소관사무) 〇〇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X조(〇〇위원회의 기능 등) 〇〇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제X조(〇〇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〇〇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 조율·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됨</p>	<p>-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p> <p>-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p> <p>-「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임. 소관 사무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설치할 수 없음</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p>-「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②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③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p> <p>-「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p>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요건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p> <p>-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자치사무에 관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8조제3항 및 제22조에 비추어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둘 수 없음</p> <p>-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설의 사무국 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함</p>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p>-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위원 위촉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 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하거나 권한행사에 관하여 소극적·사후적 개입의 범위를 넘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허용 될 수 없음</p>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p> <p>-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함</p> <p>-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간사 또는 사무기구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규정, 실무위원회 규정, 전문위원 규정,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규정, 공청회 등의 개최 규정, 수당규정, 운영세칙 규정 등을 두나,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신설할 수 없음</p>
과태료 관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임	-개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부과요건·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 조례 등에서 별표 등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본칙규정			
구분	예시	의의	유의사항
			<p>-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 상한 또는 범위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것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지 과태료 금액의 범위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에서는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p> <p>-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 또는 조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함</p> <p>-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거나 과태료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일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p>

부칙규정		
구분	유의사항	예시
원칙 (규정 방법 및 순서)	<p>-부칙은 장(章)의 하나가 아니므로, 장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고 “부칙”이란 표제 아래 모아서 규정함. 또한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며,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되,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함</p> <p>-부칙에서 개정된 본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함. 특히 본칙에서 신설되거나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의 신설 규정”이나 “제○조의 삭제규정” 등의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함</p> <p>-부칙에 규정하는 사항과 그것들을 배열하는 일반적인 순서: (1) 조례·규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2) 조례·규칙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3) 기존 조례·규칙의 폐지에 관한 규정, (4)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5) 조례·규칙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6) 조례·규칙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7) 조례·규칙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8) 조례·규칙과 관련된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규정, (9) 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p>	<p>제5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는 폐지한다.</p> <p>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p>
시행일 관련	<p>-조례·규칙의 시행일이란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날을 말함. 조례의 시행일은 조례·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인 공포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과 구분됨</p> <p>-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조례·규칙이 효력을 발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 이므로 그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특히 여러 조례·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조례·규칙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의 시행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함</p> <p>-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②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③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④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음</p> <p>-시행일을 정할 때 해당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고시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과 함께 주민이 조례·규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 후 ○○년 /개월/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7호의</p>



부칙규정		
구분	유의사항	예시
	<p>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주어야 함</p> <p>-조례·규칙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정하여 입안한 경우에는 조례·규칙의 공포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무효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p> <p>-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개정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해야 함. 다만, 위임법령의 시행일보다 조례가 늦게 공포되었음에도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로 정하게 되면 소급입법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위임법령의 시행일과 같은 날로 정할 수 없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함</p>	<p>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	<p>-어느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부칙에 폐지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조례 또는 규칙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음. 시행하고 있던 조례 또는 규칙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또는 규칙의 폐지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원칙임</p> <p>-그러나 어떤 조례 또는 규칙을 발전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 전부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구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고 신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두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 또는 규칙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조례·규칙의 부칙에서 기존의 조례 또는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1건으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해야 함</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조례 2. …조례</p>

부칙규정		
구분	유의사항	예시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에 관한 규정	<p>-조례 또는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행위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일을 정할 때에는 그 조례 또는 규칙의 시행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p> <p>-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부칙에 둬. 준비행위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막연히 “이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조례/규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규칙 시행 전에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조례/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규칙 시행 이전에 제7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을 ...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조례/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부칙규정		
구분	유의사항	예시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 에 관한 규정	<p>-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시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부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함</p>	
	<p>-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 자치법규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 자치법규를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을 “특례”라고 함</p>	제XX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p>-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자치법규를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경과조치”라고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름</p>	제X조(…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은 …을 하지 아니한다.
	<p>-적용례의 규정순서에 관하여 ① 일반적 적용례가 있으면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그 다음에 두며, ②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③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적용례를 둠</p>	제X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p>-특례규정의 제목을 붙일 때에는 ‘특례’라는 표현을 사용함. 가끔 내용상 특례인지 경과조치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없지 않으나, 특례는 구 자치법규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을 신 자치법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 자치법규에 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신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상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로 규정하도록 함</p>	
	<p>-경과조치의 규정순서에 관하여 ① 일반적 경과조치는 맨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다음에 두며, ②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③ 경과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 뒤에 두며, ④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둠</p>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병준 책임연구원

총괄

□ 연구진

김진영 책임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

임다정 연구원